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인쇄/1998년 12월 26일

발행/1998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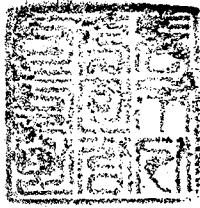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5-6

5,000원

연례경세보고서 98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 통일환경

1999년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4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와 군사안보적 협력·갈등을 병행하면서, 대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안정 유지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미국의 역내 질서 주도권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나, 러시아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주변4국은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군사·안보측면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 주변4국은 모두 현상유지·긴장불원의 정책기조를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정세는 북한체제의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 동북아정세

1999년 주변4국은 전년도와 같이 정상회담과 안보대화를 통해 양자관계를 개선하면서 동북아의 신질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본은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과 전역미사일 방어(TMD)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간 안보협력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동북아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안보부담을 일본에 전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의 TMD 개발에 반대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일, 중·러 양자관계 진전이 새로운 냉전구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러관계가 동맹성격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중, 일·중, 일·러간 경제협력관계가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9년에도 미·일·중은 아시아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한 조정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일본은 금융체제개혁과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중국은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元貨) 가치를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이유로 한·일·중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1999년 말로 예정된 총선을 고려하여 개혁정책을 당분간 다소 둔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중은 러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2. 한반도 통일환경

1999년에도 미·일·중·러 4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중시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하는 한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와 중·러와의 전략적 제휴에 기초하여 대북 압력과 협상을 병행할 것이다. 일본은 당분간 북한의 로켓발사,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개선에 소극적일 것이나, 북·미 관계개선 추이를 관망하며 수교교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긴장불원의 불통불난(不統不亂) 기초하에 핵 문제 해결과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

북 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차원에서 대북 우호관계 복원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한편 1999년 상반기 한반도에는 북한 금창리 핵의혹 해소 협상과 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깨면서 까지 얻어낼 실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국은 대타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북한정세

1999년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타개와 체제유지를 위해 군부를 중시하는 통치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중앙당 차원의 조직 및 인사 개편을 실시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경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대미 협상, 대일 적대·접근 병행, 대중·러 우호협력관계 회복, 나아가 대유럽연합(EU) 관계개선 및 서남아시아 관계강화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정경분리정책」에 편승, 남북당국간 직접대화는 회피한 채 통일전선 전술과 실리추구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당국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대내정세

<정치동향>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승계를 완료한 북한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토대하에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면서

경제난으로 침체해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자 '사회주의 강행군'을 강조하고 있다.

1999년 북한은 체제정비를 마무리짓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식적인 직책들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의 공식적 조직을 통한 제도적 통치보다 극단적인 인적 통치에 기반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구들이 김일성 시대처럼 실질적인 협의·결정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북한은 군부를 우대하고, 국정 전분야를 군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군사중시의 정치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총대철학', '혁명적 군인정신', '군민일치사상' 등의 구호를 통해 전사회의 병영화를 정착시키고자 할 것이다.

<경제동향>

1999년 북한은 「김일성헌법」(’98.9.5)에 반영된 현실적응적 경제개혁과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하는 북한식 개혁·개방을 생존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책임생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부문에서는 북한식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공업 제품,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에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크게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8·3인민소비품' 생산근로자를 계획경제부문에서 분리하여 비공식부문의 생산을 적극 장려할 것이다.

유통·소비부문에서는 사적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농민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별로 소규모 상설시장이 등장할 것이다. 국가는 배급·공급제도를 축소하고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일부를 수매할 것이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물류

중개 및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사회동향>

북한은 1999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할 해로 규정하고, 수령을 결사 옹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강계정신'을 기치로 동원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배급의 불안정, 주민이동의 증대, 탈북자 증가, 개방분위기 확산 등으로 사회적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주이동·여행 등 주민유동성의 증대로 조직생활과 학습생활이 부실화되어 북한주민의 사상적 응집력이 약화될 것이다. 청년·지식층을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판의식도 형성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 경수로건설, 금강산관광 등으로 국제기구 및 남한주민과의 접촉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개방지역인 나진·선봉과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한 북한내부 체제와의 비교인식도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정보유입 통제와 사상교양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 체포 및 송환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향>

북한은 경제력 저하로 인하여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기 보다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증강하고 대외 협상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도 북한은 「강성대국」 구호아래 군사력 증강노력을 지속하며, 군대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반대급부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군사동원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전쟁 위협을 강조하고 전시훈련을 보다 강화하며, 대남 침투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향후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 관련 북·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반도를 또 다시 전쟁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대외동향

1999년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체제안정을 목표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강성대국'론과 신헌법의 내용을 볼 때,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미 제네바합의」('94.10) 틀을 유지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미사일 등 현안 협상과정을 통해 경제제재 추가완화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핵, 미사일문제에 관해서는 강경 자세를 취할 것이다. 상반기 중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현안 관련 일괄타결이 시도될 경우, 북·미관계 개선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배타적인 쌍무적 정치관계, 즉 혈맹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김정일의 방중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고지도자의 교환방문 성사를 낙관하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일부 사안에 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기로 인

해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혼란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로켓발사, 일본인 납치의혹 등 대립상황에 놓여있는 바, 북·일관계는 당분간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하반기에 북·일 수교교섭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신조약 및 고위인사 정례교환 합의('98.12.4)에 따라 '안보위협시 상호협시'조항을 포함한 신조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실리 및 대미·일 협상수단 확보차원에서 대러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러시아 또한 약화된 동북아 영향력의 회복을 위해 대북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3. 대남동향

북한은 남북대결 구도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1999년도 현재의 대남정책들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을 이용하여 당국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선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정부 배제전략을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하여 점차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 및 분열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 등의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북·

미 협상이 교착될 경우, 한반도 긴장을 대미 협상력 제고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대남 도발 및 침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남북한관계

1999년 남북한관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先) 대미, 후(後) 대남관계 개선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국 배제, 민간 접촉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지속될 것이나, 경제적 실리 확대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증가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당국간 대화도 진전될 것이다.

1. 남북대화

1999년 남북한관계의 최대 이슈는 당국간 회담 재개와 4자회담의 진전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과 경협을 기대하고 있지만, 남북협력에 수반될 개방 여파를 차단하고 남북긴장 유지를 통해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 차원에서 민간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비료지원, 경협사업 지원 등과 관련한 특정회담이 당국간에 개최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북·미간 일괄타결이 시도될 경우,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반관반민' 단체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소속된 민간단체들을 통해 비당국간 대화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

한편 1999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4자회담 제4차 본회담의 핵심 현안은 분과위 구성을 매듭짓는 일이다.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회담운영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9년도에는 4자회담 분과위원회가 구성·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2. 경수로사업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미 의회와 일본의 강경 입장으로 다소 지연되었던 경수로사업은 1999년 1월까지 부지공사 완료를 예정으로 남측 근로자 150여명과 북측 근로자 100여명이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이 재원분담에 합의('98.11.9)함에 따라 1999년에는 일괄도급 방식에 의한 본공사가 시작되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한전과 KEDO간의 주계약과 한·일과 KEDO간의 차관공여협정이 체결되고, KEDO와 북한간에는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 「핵사고시 책임」, 「상환조건」, 「핵안전」, 「사용후 연료」 등 7개 의정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한·미·일·EU 등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북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 때문에 우여곡절 속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다만 금강리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한 북·미 협상이 난관을 겪게될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 있으며, 결렬될 경우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교류·협력분야

국내 기업들의 외화난과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해 상당부분 축소되었던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의 정착과 국내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다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한편 그 성격은 종전의 일방적 시혜 차원에서 쌍방적 호혜 차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협력사업 추진 시에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과 북한측의 협상결과에 따라 경험의 추진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 시험재배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과 북한의 외화획득 기대가 맞물려 문화·언론·종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남북체육교류,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등과 관련하여 체육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4. 인도주의적 사안

이산가족문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정책과 북한의 제한적인 태도변화에 힘입어 제3국내 상봉을 포함, 개별적 상봉사례는 증가할 것이다. 남북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부모 고향방문 협상의 진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위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대북지원은 단순 긴급구호형 지원방식에서 농업 및 보건·의료구조 개선과 같은 개발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은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들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국군포로송환 요구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압력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1999년은 협력과 갈등 병존의 동북아정세와 미·일·중·러의 대한반도 현상유지정책으로 남북한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북한 또한 1999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할 해로 규정하고, 북한판 '제2의 건국선언'인 「강성대국」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치 및 군사강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강국 건설 차원에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대외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햇볕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1999년 남북한관계는 비록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지라도,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시

설 사찰문제로 인해 다소 우여곡절을 겪은 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가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I. 통일환경	1
1. 동북아 정세	1
가. 동북아 안보환경	1
(1) 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 이완 및 미·일·중 3각 협력체제 태동	1
(2) 경제위기와 4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3
(3)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과 새로운 안보위협	5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6
(1) 미·일관계	6
(2) 미·중관계	9
(3) 미·러관계	11
(4) 일·중관계	14
(5) 일·러관계	16
(6) 중·러관계	19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22
가. 한·미관계	22
나. 한·일관계	25
다. 한·중관계	27
라. 한·러관계	30
II. 북한정세	33
1. 대내정세	33
가. 정치동향	33

나. 경제동향	36
다. 사회동향	41
라. 군사동향	44
2. 주요 대외동향	47
가. 북·미관계	47
나. 북·중관계	52
다. 북·일관계	55
라. 북·러관계	59
3. 대남동향	62
Ⅲ. 남북한 관계	67
1. 남북대화	67
2. 경수로사업	71
3. 교류·협력분야	75
가. 경제분야	75
나. 사회문화분야	81
4. 인도주의적 사안	84
가. 인권문제	84
나. 대북지원	87
다. 이산가족 문제	91
라. 미송환 국군포로	94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96

<부 록>

I. 통일환경

1. 동북아 정세

가. 동북아 안보환경

동북아 지역은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탈냉전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역내 국가간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며, 군사·안보적으로는 협력과 대립이 병행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역내질서 주도권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내 사정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1) 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 이완 및 미·일·중 3각 협력체제 태동

냉전종식 이후 유동적이던 동북아 질서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일단 미·일 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96.4.17)하고, 방위협력지침을 개정('97.4)하여 안보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영향력 견제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개최('96.4.25)하고 상호 신뢰 및 협력 증진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러는 양국 관계가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의 성격을 띠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2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1998년에 들어 한반도 주변4국은 빈번한 상호 교차정상회담과 안보대화를 통해 양자관계를 개선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일간 안보협력체제는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러도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인 군사·경제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미·일 및 중·러 이외의 양자 관계도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관계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중관계는 1996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되었다. 양국은 1997년 10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정례화, 군사분야 협력, 워싱턴과 베이징간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하고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1997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동북아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중국도 외교적 영향력의 확대 및 국가위상의 제고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양국은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98.6.27)을 통해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확인하고, 그 실천적 조치로서 전략 핵미사일 상호조준 해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대화강화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합의하여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연안에서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98.12.2)하여 군사안보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가시화 하였다.

한편, 동북아 질서구축과정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강화와 더불어 중·러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는 오부치-장쩌민 정상회담('98.11.26)에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관계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경제협력을 증

대시켰다. 러시아와는 오부치-옐친 정상회담(11.12)에서 양국이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중 양국관계는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만 순탄하게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양국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 속에 대만의 포함 여부 및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긴장된 외교 행태를 보여주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 일본 등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적 위상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2) 경제위기와 4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198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정부주도의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성장 집착, 투자 왜곡, 비정상적 금융구조, 정경유착,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쳤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자본의 이동성 증대, 세계 산업구조의 재편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아시아 각국은 마침내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 아래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비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도 작년 말부터 동남아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아 대형 금융기관 연쇄파산 등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중반에 들어 아시아 경제 위기는 러시아 및 동구유럽과 중남미 지역까지 파급되었다.

아시아 경제위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는 물론 지역 차원의 안보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는 한국에서 헌정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2.25)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에서는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지불유예를 선언(8.17)한 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옐친 대통령의 국내외적 입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약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동북아 질서는 사실상 미·일·중 3국간의 관계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냉전 이후 국방비 감축, 산업구조조정 등을 시행한 미국 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8년 연속 낮은 물가상승률 및 실업율을 구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8%에 미달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元)화 가치를 고수하며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자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최근 대중국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외교적 타격을 받은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도 주도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질서 재편과정의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최근 한반도 주변4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국제적 위상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안보질서 재편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3)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과 새로운 안보위협

탈냉전 시대에 들어 한국을 비롯 주변4국은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북아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인 전문가와 정부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정부차원(Track II) 형태의 안보대화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를 이끌고 있는 Track II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는 한국과 주변4국이 참여하여 1993년부터 시작한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다. 또한 이들은 1994년부터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미·일·중·러 4국간에는 국방담당 고위인사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종래 군사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미·일·러 3국과 군 인사 교류를 증대하고 있다. 미·중은 금년 6월 정상회담에서 상호 핵미사일 조준 해제에 합의하고, 12월에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하였다. 미·중간 안보관계 개선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 3각 협력체제 또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

한반도 주변4국은 모두 국제환경이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기보다는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의 유산인 남북한 및 중·대만의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각국간 영토문제와 군비경쟁이 여전히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및 중국·대만·일본은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방현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최대 불안요인은 북한이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재개 위협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역내 안보환경을 경색시키고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8.31)한 후 미·일은 미사일방어체제인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은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TMD 개발계획을 자국에 대한 보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국의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 가능성,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 등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4국간의 외교경쟁이 이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1) 미·일관계

일본 정부는 자위대 관련법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주변 유사시 대미지원 근거법인 「후방지원법」을 제정하고 미·일간 체결('96.4)된 「물품·서비스 조달협정」(ACSA)에 관한 개정법안을 1998년 4월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주변사태의 범위가 애매 모호하여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범위가 불명확하며,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협력이라는 새로운 자위대 임무가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등의 논란을 야기시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오키나와현(縣)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비행장을 나고시 인근 해상에 인공 헬리포트를 건설·이전키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육상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간에 합의가 된다면 해상시설 이외의 방안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안보분야에서는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기둔화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제기한 서머스(Lawrence H. Summers) 미 재무 부(副)장관은 일본의 공공투자확대 및 추가감세 등을 위한 10조엔 규모의 재정 지출 필요성을 지적(3.19)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회복이 아시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기부양책 제시를 촉구(4.3)하였다. 양국은 자동차 시장개방 등 개별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1998년 7월 30일 새 총리에 선출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취임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제정과 오키나와현(縣)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 해결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고무라(高村) 일본 외상은 미국을 방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및 코언 국방장관과 안보·경제현안과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협의(8.14~15)하고, 일본 국회에 계류중인 주변사태조치법, 자위대법 개정안 등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의 조기제정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반

도 주변정세에 공동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8.31)한 후 미·일은 뉴욕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9.20)하였다. 양국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미사일과 관련부품, 기술의 수출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확산방지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TMD 구상을 위한 공동기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의 도입을 결정할 경우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외무·국방장관 회담과 동시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9.22)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오부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11.20)하였다. 양국 정상은 동 회담에서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과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의 TMD 구상 참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일본 시장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9년에는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들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양국간 안보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TMD 기술협력 문제가 될 것이다. 양국간 안보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일본으로서는 위성정보수집 및 방공능력 확보,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 위기 관리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금융체제 개혁과 경기부양책 등을 이행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대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에는 특히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농업자유화 협상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쌀시장 개방문제로 양국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 미·중관계

클린턴 미대통령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98.6.25~7.3) 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협력과 교류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는 1997년 10월 장쩌민 중국주석의 방미시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은 경제분야 보다는 핵확산금지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에 비중을 두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개입전략의 수행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확대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건설적 개입전략을 바탕으로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천안문사태 이후 지속된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자국의 안보 및 경제발전 진전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대미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둘째, 미국은 해마다 증가되는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시장의 확대 개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국 역시 미국의 협조 없이는 WTO 가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견하였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 등 군비경쟁의 촉발 요인 억제를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4자회담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금지조약에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미·중은 정부간 회담의 연례화,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에 핵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중국은 대이란 핵기술 이전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1997년 5백억 달러에 달한 대미 무역흑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미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조항(MFN) 자동 연장 보장과 WTO 가입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추가시장 개방, 무역체제 개편 등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촉구한 데 반해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확대와 서방자본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염려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WTO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살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공산품 소비재, 서비스분야에서 충분한 시장개방이 실현되지 못해 중국의 WTO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밝힌 바 있다('98.6.19). 또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s)에 의거 대만관계를 유지·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한 데 비해, 중국은 미국과 맺은 3개의 공동성명에 의거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수용하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1999년 미·중간 안보협력은 1998년도에 비해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조항(MFN)을 계속 연장할 것이나, 중국의 WTO 가입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미·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과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다.

(3) 미·러관계

1998년 미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개혁정책 수행을 지지하고 식량과 식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제3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I) 협상 착수 합의와 제3국의 미사일 발사 및 조기경보에 대한 정보교환 합의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정책 때문에 양국은 이라크, 이란, 코소보 및 미·일간 TMD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클린턴 미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영국 버밍햄에서 비공식 회담(5.17)을 갖고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이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되는 경우 「제3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I) 협상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해병 1개 소대가 NATO의 '세계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에 따라서 덴마크와 그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군사훈련(5.18~29)에 최초로 참여하였다.

엘 고어 미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7.24~25)하여 키리엔코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 우주정류장 계획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양자가 공동의장인 양국간 경제통상·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검토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8.17) 이후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개혁을 회생시키기 위한 클린턴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간의 8차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9.1~2)되었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우호와 안보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양국 플루토늄 비축량의 50t 감축, 제3국의 미사일 발사 및 조기경보에 관한 정보 교환,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확대 등 6개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고수를 주문했을 뿐 러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미국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IMF의 재원증액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고 G7도 러시아 경제회복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금융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10월 미국정부에 200~300만t의 곡물과 5,000t의 육류 등 긴급 식료품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 계획과 관련하여 엘친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1980년대 이라크에 판매한 70억 달러 군사 무기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라크의 원유판매 금지에 대한 국제제재와 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가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7개 러시아 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하였다(7.28).

신유고연방의 코소보 사태와 관련, 미국은 세르비아 공화국군을 코소보주에서 철수시키고 분리독립을 원하는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한 유엔의 요구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세르비아 공습을 준비하였다. 이에 대해 10월 11일 러시아는 NATO가 세르비아 군사기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 유고와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NATO 중심의 유럽안정 공고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도 미·러 양국관계는 1998년 일년 동안 세계적 차원에서의 양자관계에서 나타난 협조와 견제라는 특징을 보였다. 전략 무기감축 계획의 틀 안에서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해군기지를 시찰(3.2~6)하고 협정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면서도, 러시아 연해주의 하싼 지역에서 미국 제7함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간에 재난지역에서의 구조작업을 훈련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실시(8.6~7)하였다. 또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서 클린턴 대통

령과 엘친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미사일 발사와 사전예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안보와 군사면에서 이와 같은 미·러 양국의 협조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일간의 TMD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역내국가의 금융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의 나홉카에서 개최(5.29)된 국제투자 포럼에 참가하여 러시아 자유경제지대의 발전방안, 항구건설, 어획 및 생선가공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러시아는 APEC에 정회원국으로 처음 참가(11.12)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아태 경제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99년 미·러관계는 기본적으로 1998년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양국간 안보·군사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국화된 국제질서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양국간 부분적인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엘친 대통령은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개혁의 사회적 대가가 너무 커서 개혁정책 일부의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엘친 대통령이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1999년 말로 예정된 총선을 고려하여 개혁을 후퇴하는 경우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양국은 해난구조와 석유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등을 통해 안보·군사 면에서의 협력을 긴밀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9년에도 미·일의 TMD 계획에 반대하고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형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역내에서 자국의 입지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대러 대 규모 투자는 1999년에 기대하기 어렵다.

(4) 일·중관계

일·중관계는 과거사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측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아울러 언제라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부문에서는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중 양국은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관계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면서 정부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이하여 1998년 8월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고무라(高村正彦)외상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지리적 범위가 아닌 상황적 개념’임을 재차 설명하였고, 이에 중국의 탕자쉬엔(唐家璇) 외교부장은 ‘역사문제나 대만 문제와 관련한 원칙들을 엄수해 줄 것’을 언급하면서 역사인식이나 대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무라-탕(高村-唐)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차관급 협의모임’의 검토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장급 수준의 회합개최’가 합의되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부치-장쩌민 도쿄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관계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은 과

거사 문제로 다소 갈등을 야기하였지만, 한반도 주변4강 상호간의 동반자관계 구도를 완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서 오부치 일본총리가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의 '통절한 반성' 입장을 반복하고 "이번 방일이 양국간 역사문제를 종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지만, 공동선언에는 '사죄' 표현이 없이 '침략 반성'만 명기됨에 따라 '정상서명 없는 공동선언'이라는 파문을 초래하였다. 대만문제와 관련, 장쩌민 국가주석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 내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경우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오부치 총리는 '1개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표명하는 한편, 미·일 방위협력 범위내 대만해협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개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반면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엔(円)차관이 중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오부치 총리는 중국의 WTO 가입지지 및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 1999~2000년간 3,900억엔 규모의 차관 제공 방침 등을 밝히면서 경제협력 추진계획이 명시된 '행동 계획'을 공동선언의 부속서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중 양국은 갈등 속에서도 주요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우호관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일·중관계를 낙관만 할 수 없다. 즉 양국관계에는 역사문제로 인한 정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고, 따라서 양국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익중심의 대외정책을 추구할 경우, 일·중간에 파워게임이 야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1999년 일본은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 가능성을 견제하는 한편, 향후 중국과의 공존을 중시하여 양국간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중 건설적 전략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일·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강화시키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즉 중국은 미·일관계의 강화에 대응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및 중·일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5) 일·러관계

1998년 일·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4월(하시모토·엘친)과 11월(오부치·엘친)에 개최하는 등 정부간 접촉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정치·안보 대화 및 군사교류도 확대하였다. 또한 북방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투자보호 협정체결 등 경협확대에 합의하고, 21세기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한 「모스크바 선언」¹⁾을 발표(11.12) 하였다.

「모스크바 선언」에서 양국은 정치·경제·안보 등 제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0년까지 체결기로 한 평화조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러 합동위원회」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 「모스크바 선언」 주요내용

- 일·러 양국은 「동경 선언」(’93.10)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산을 극복하고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창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공유
- 「동경 선언」(’93.10) 및 크라스노야르스크(’97.11)·가와나(’98.4) 정상회담의 합의에 입각, 평화조약체결 교섭을 가속화하며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
- 「하시모토·엘친플랜」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매년 정부간 무역·경제위원회를 개최
- 러시아는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 및 국제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고, 일본은 러시아의 개혁 노력을 지지
- 동북아 안보·신뢰 조성을 위해 일·러 양국을 비롯한 관련국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

안보대화를 위하여 전후 최초로 우스이(臼井) 방위청장관이 러시아를 방문('96.4) 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이 방일('97.5)하였으며, 하시모토 총리의 방러로 이루어진 정상회담('97.11) 시 장관급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쓰가와(夏川) 통막(統幕)의장이 러시아를 방문(5.31~6. 7)하여 이를 재확인하였다.

7월 29일 북부해역에서 일본 자위함 3척, 항공기 5대와 러 전함 2척 및 항공기 2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공합동 기동훈련을 전후 최초로 실시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안보분야에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오부치 총리와 엘친 대통령은 북방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차관급 위원회 산하에 「국경 확정 소위원회」와 「북방 4도 공동경제활동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북방영토가 일본령이었던 당시 동지역에 거주했던 일본 국민들의 무비자 교류 확대 등 자유 왕래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측의 국경선 확정 제안에 대해 러측은 답변을 회피하고 북방 4도를 러시아의 관할하에 두되 동지역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 일본의 경제활동에 면세 등 특별대우를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러측 제안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1999년 엘친 대통령 방일시 회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경제문제와 관련, 양국은 일본의 포괄적인 대러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 「하시모토-엘친 플랜」('97.11)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일본 투자가들에 대한 우대 조치 및 수익 보장, 분쟁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투자보호협정」('98.7, 키리엔코 러 총리 방일시 가조인)에 서명하고, 상호 5,000만 달러를 투자, 러시아 경제개발에 대한 일본의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일·러 합작회사를 1999년 1월중 설립하기로 하였

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장급협회의 연내 개최, 모스크바에 「청소년 교류센터」(가칭 「오부치·엘친」 센터) 건립 등 민간차원의 인적 교류 확대에도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15억 달러 비연계 융자(untied loan)중 8억 달러를 금년내 제공한다는 총리간 전화회담시의 약속(11.6)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 기업·인재육성, 일본 정책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에 1억 달러 추가지원,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무상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오부치 일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모스크바 선언」을 바탕으로 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하시모토·엘친」 정상회담('97. 11; '98.4)을 통해 형성된 관계개선 흐름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평화조약체결 시한(2000년) 명기, 과거 북방영토 거주 일국민의 무비자 왕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러측의 지지확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영토문제 관련 러시아 측이 일본의 국경선 확정제안('98.4) 답변을 유보한 채 '경제적 공동관리' 방안을 역제함으로써 당초 영토문제를 쟁점화시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일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러시아 측은 엘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상실, 보수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영토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대일 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도의 일·러관계는 오부치 총리의 자민당 집권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러시아 중시외교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이 경제문제 등 당분간 국내문제에 전념해야 할 입장이고 최근 일·러관계가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을 토대로 급진전되어

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은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북방영토 관련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9년도 일러 관계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중·러관계

1998년 중·러는 총리 정례회담과 군사지도자 교환방문 및 장쩌민-엘친간 비공식 지도자회담 등 활발한 접촉을 통해 1996년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21세기까지 지속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간에 정치·안보적 관계증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미국 주도에 의한 신국제질서 형성을 반대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펑 중국총리 방러시(2.17~18) 중·러는 「공동성명서」에서 이라크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 의도를 견제하였다. 세르기에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10.21~24)에도, 중·러 군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조성하여 지역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미·일에 의한 TMD 구축을 반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엘친의 건강악화로 병실에서 이루어진 제1차 비공식 정상회담(11.23)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한 중·러관계' 제하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특정 강대국의 군사정치동맹 강화를 반대한다"는 중·러의 입장이 명확히 공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신국제질서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국견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중·러정상은 유엔개혁 논의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미·일의 TMD 연구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러는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정치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러는 양국간의 '21세기를 지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제3국을 겨냥한 동맹의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선문제로 인하여 무력대결까지 벌인 바가 있는데,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서부지역 국경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1994년의 「서부 국경선협정」에 의거하여 국경선 획정작업을 마무리짓고, 55km에 이르는 「중·러간 서부 국경선 획정작업 결과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러는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군축협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최고지도자간 전화 핫라인이 정식 개통(5.5)된 것도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로써 정치·안보 영역에서 중·러간 신뢰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해·공군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군사무기·장비 구매정책을 지속하였으며, 러시아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중국과 군사무기·장비 판매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8년 6월 마닐로프 러시아 군참모총장이 중국 방문시 중·러는 군사장비 공동 연구개발·생산에 합의하고, Su-30 전투기의 판매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0월 세르기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무기판매·기술이전 문제와 군간부 훈련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만문제에 대한 「4불정책(四不政策)」을 표명하였던 것도 중·러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러시아는 대만독립 반대, 2개의 중국반대, 대만의 유

엔가입 반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러시아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경제교류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 직전 러시아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대일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남아시아 지역안정문제와 아시아금융위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러는 협력을 약속하였다.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인 핵실험으로 서남아시아에서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 중단을 촉구함으로써 서남아시아의 군사위기가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가 러시아와 중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러는 금융부문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키리엔코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7.14~15)하여 경제협력문제를 중점 협의하였는데, 러시아는 중국에게 러시아의 재정위기 극복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IMF를 통해 러시아에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중·러간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양국간 변경무역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양국간 변경무역 규모가 6,817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된 규모이다.

중·러간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리핑 총리 방러시 합의된 사항들이다. 총리회담에서 양국은 「쾌속선 건조 협력의정서」, 「정부차관·채무 해결협정」, 「1998년도 경제무역협력 협의서」 및 「러시아 주민의 중국내 변경무역도시 출입수속 간소화 각서」 등을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은 1997년말 합의된 이르쿠츠크 천연가스선

공동개발과 우주항공분야 협력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 장쑤성 쉰원강 핵발전소 건설합작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9년은 중국과 구소련이 국교를 수립한지 5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다. 또한 중·러간에는 정례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을 경우, 1999년 중·러간 정치·안보면에서의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 경제위기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러간 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한국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 미국주도하의 IMF 관리체제 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

1998년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2.25) 이후 워싱턴(6.9)과 서울(11.21)에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미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6.9)에서 양국은 「한·미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하고(6.9), 상대국에 기업설립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 경제위기 극복을 돕기 위하여 1995년 이후 중단된 「한·미경제협의회」의 재가동, 미국 해외투자보증공사(OPIC)의 대한 투자보증사업 재개, 수출입은행을 통한 20억 달러 차관 제공 등을 재확인하였다. 서울정

상회담(11.21)에서는 향후 2년간 8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과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한국은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한·미양국은 「한·미항공자유화 협정」 체결(6.9)로 아태항공시장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였고, 자동차협상을 타결(10.20)하여 양국간의 경제관련 분쟁을 크게 해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측이 제기한 쇠고기, 철강, 의약품, 무역 등 모든 통상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11.21)하였다.

한·미관계의 기초인 안보동맹도 더욱 강화된 한 해였다.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1.22)하여 한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점검하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였다.

6월 22일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과 7월 12일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발생하자 한·미양국은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해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하와이에 주둔중인 태평양함대 사령부 7함대소속 로스 엔젤스급(7,000t급) 공격용 핵잠수함과 P-3C 대잠초계기 등 일부 대잠장비를 한국에 급파하여 한국의 대간첩작전을 지원하였다. 미해군 함정과 병력이 한국의 대간첩작전 지원을 위해 투입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로 이는 미국이 한반도 안정을 수호하려는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미양국은 북한이 다단계 로켓발사에 따라 중거리미사일 개발능력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수출 등을 규제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180km로 묶여있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리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위기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한국 방위산업체를 지

원하기 위하여 한국산 무기부품의 미국납품, 미국기술 지원을 받은 한국산 무기의 제3국 수출허용 확대, 주한미군 장비의 한국산 구매 등 가능한 범위내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7.10) 합의하였다.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햇볕정책'과 '대북3원칙'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그동안 대북정책을 두고 야기되었던 한·미갈등이 크게 해소되었다. 양국정상은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제네바합의 준수 및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병행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국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한국에 중유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중유비용을 두고 야기되었던 논란도 매듭지음으로써 KEDO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로 지명(7.6)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타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2차례 개최되었다. 2차 본회담(3.16~20)에서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으나, 3차 본회담(10.21~24)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1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4차 본회담부터 실질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발사(8.31)와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조사 문제가 북한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자 미의회는 '99

회계연도 KEDO 지원예산에 엄격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북한정책조정관에 임명(11.12)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페리조정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수립과 관련 미행정부내 협의와 행정부와 의회간 정책조정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양국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6.9)하여 사법제도 공조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한국측이 관심을 보이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은 이라크사태로 인한 한·미안보협력회의(SCM)의 연기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비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한 범죄인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전으로 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이다.

1999년에도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 특히 8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내년에는 다소 둔화되고 한국이 외환위기를 벗어나면 미국이 통상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미양국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 의회가 정한 기한인 1999년 6월 1일 이후 대북포용 정책기조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나. 한·일관계

1998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

계를 이루었으며, 한·일 어업협정도 타결시켰다.

10월 8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일본이 양국간의 과거사를 문서로 반성하고 사과함으로써 갈등과 협력의 20세기를 청산하고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일문화교류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지평을 넓혔다.

일본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30억 달러의 산업자금을 연리 2.3%로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동 자금은 한국이 자금운용권을 갖는 비연계차관(untied loan)이다.

그리고 양국은 경제각료 중심의 한·일 각료간담회를 활성화하기로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블록경제시대에 대비한 동북아시아 3국(한·중·일)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오키라 가즈오 주한대사는 한·일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열린 첫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관 IMF인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일본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기대를 표명한다"는 언급으로 우회한 반면에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지를 받아냈다. 그리고 제네바협약과 KEDO 등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일본측의 물적 지원 의지를 잠정 확보하였다.

신어업협정 최종 조정안은 동해중간 수역의 동서 경계선을 양국 주장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으로 하고, 어획량은 3~5년후에

양국이 동일량으로 삭감하는 선에서 9월 24일 타결되었다.

독도문제는 주변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켜갔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계속된다지만 독도를 지명이 아닌 좌표로 표기하고 그 영유권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향후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 우익 인사들의 망언이 터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상존한다.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내 일부 우익인사들의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촉발시킬 소지가 있으며, 한국내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사 문제 중 중요사안인 군대위안부 문제(양국정상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음)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이 밖에도 6자회담,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양국무역불균형 시정방안, 대중문화 개방속도와 폭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다. 한·중관계

한·중간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도약하였다. 경제부문의 교류·협력 확대가 누적됨으로써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었다. 한·중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 및 각계 지도층의 상호 방문으로 신뢰관계가 증진되고 공통의 인식과 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발표된 12개항으로 구성된 긴 공동성명문에



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를 '선린우호관계'에서 '21세기의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이래 중국이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동남아국가연합 등 중국에게 극히 중요한 상대에 국한되어 있는 바, 중국이 수교 6년 만에 한국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향후 한국이 중국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의미하는 동반자관계는 정치와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중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노력을 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중국은 남북한 민간 경제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4자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중국측의 의사표명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양국간의 신뢰가 많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함과 아울러 기존에 중국이 지지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평화통일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통한 통일기도에 반대하였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미 쌍방간에 협의할 문제이지 4자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아닌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1999년 1월 중순 개최될 4자회담 제4차 본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북·미간 평화협정이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최종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차회담에서 미·중의 역할은 보조적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4차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왔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 희망은 북한핵 의혹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이 우회적으로 표명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여 미국주도의 무력에 의한 북한핵 의혹 불식을 원치 않았다. 만일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대북 지지·지원정책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국방장관급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는 국방차관급 대화만을 수용해 왔다. 한·중 안보대화를 국방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한국측의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미·일의 TMD 공동 연구개발 가능성을 감안할 때, 1999년 전반기에는 한·중 안보대화가 장관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과 관련, 중국은 대한국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국측에 요구한 반면 중국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안(元)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고속도로 사업, 원전건설 사업 진출 등에 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중국경제성장률이 다소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교역 증가율의 대폭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 한·러관계

1998년 7월 발생한 양국 정보부서간의 마찰이 외교갈등으로 비화됨으로써 한·러 양국은 수교 이후 8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한국의 IMF 사태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확대 추세에 있던 양국간 경제관계도 악화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시 함정 침몰로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추모식(2.9)이 인천항에서 한·러 양국의 해군 고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러 양국 「정부간 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 러시아측 의장 시수예프 부총리의 7월초 방한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수 외무장관과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최초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회담(5.25)을 가졌다. 미하일로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대표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한(5.28~6.3)하여 천용택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역안전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러시아 군산복합체와의 군사기술협력 강화에 관심을 두고 한국내 관련 기업들을 방문하였다. 제8차 한·러 외무부 지역국장협의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6.9)되어 양국은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추진, 양국 고위인사 상호방문 문제, 옐친 대통령 특사 방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주변정세와 러시아 대내외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조성우 주러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아·대 1국장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체포(7.3)하고 '비우호적인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하여 3일내 추방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가인 러시아가 사전협의 없이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아브람킨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의 맞추방 조치를 발표(7.8)하였다. 러시

아 정부가 외교관례에 상응하지 않게 아브람킨의 재입국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갈등이 노정되었고 한국 국내 여론의 악화로 박정수 외무장관이 사임하였다. 양국 정보기관은 실무 협상을 통하여 첫째, 정보외교관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러시아에 파견한 5명의 정보외교관 철수를 완료하고, 둘째, 러시아는 아브람킨의 재입국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홍순영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된 정보외교관 상호 추방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9.17)하였고, 이로써 2개월 이상 노정되었던 양국 외교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러시아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수예프 부총리의 방한을 김대중 대통령 집권이후 최초의 양국간 고위접촉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건설적 동반자관계의 증진방안에 관한 열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협차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외교갈등으로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발생했던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96.10.1)과 관련, 러시아는 이 사건을 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단순 강력사건으로 결론짓고 한국 정부에 수사종결 방침을 10월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공작원에 의한 소행이며 용의자 중에 북한 외교관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러시아측에 부검결과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함대는 1992년 이후 4번째로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10.24~27)하고 영해 밖에서의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기동합동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APEC 각료회의(11.14)에서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하였다.

경제분야와 관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8차 한-러 외무부 지역국

장협의회(6.9)에서 러시아측이 양국간 투자증진을 위한 합작투자공사 설치를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러시아는 자국의 ASEM 가입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러시아가 대외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8.17)한 이후 러시아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국내수출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경협 차관 상환문제가 협의(11.16~18)되었는데, 러시아는 올 연말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나 아직 못 갚은 1억6,000만 달러 중 4,700만~6,300만 달러를 알루미늄, 구리 등 현물로 올해 안에 상환기로 약속하였고 올해 상환 예정분 중 나머지는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한·러 양국은 정보의교관 맞추방 사건으로 훼손된 관계를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하고 정치와 안보·군사 면에서 기존의 동반자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간에 합의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따라서 100명이 내년 초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덕근 영사 사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러시아의 대한국 무기판매 등을 둘러싼 한·러 양국간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관계는 한국의 IMF 사태와 러시아의 경제난 때문에 1999년에도 올해와 같은 답보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나, 한국의 IMF 사태 극복 이후에는 교역규모와 투자 등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한·러 경제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I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1998년 북한은 헌법개정과 김정일의 공식승계라는 커다란 정치행사를 가졌다.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9.5)에서 채택된 수정 헌법에서 북한은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정무원을 위상이 강화된 내각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대표직으로 신설하였다.

김정일의 공식승계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는 대신 실질적인 국가 최고직책으로 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되는 형식으로 완료되었다. 개정된 북한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2조는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방위원장 추대사에서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말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국가 최고직책을 맡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과 김정일의 공식승계로 김일성 사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군사비상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군부중시의 정치체제가 국방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제도화된 측면도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 북한은 조직과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세대교체와 함께 군부중시의 성격을 보여준다. 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주석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등 원로그룹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지켜온 노장청 배합구도에 의해 각각 서열 4, 5, 6위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고서열인 국방위원장 김정일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총리 홍성남이 각각 서열 2, 3위를 차지하였다. 권력 서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위원의 서열이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이 서열 7위에 오르는 등 국방위원 전원이 20위안에 들었다. 국방위원의 서열상승은 4일 후에 개최된 북한정권창건 기념일인 9·9절 행사 주석단 서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백학림을 제외한 국방위원 전원이 서열 20위안에 포함된 것이다.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인민무력상 김일철보다 상위서열을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국방위원회와 군대내 당조직의 위상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열은 기존 북한의 권력서열을 파괴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상위서열은 전통적으로 당정치국원과 후보위원의 순으로 매겨졌으나, 이번에 연형록과 홍성남 등 국방위원들이 일부 정치국원보다 상위서열을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은 대폭적인 인사개편은 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7.26)에서 687명의 대의원중 443명(64%)이 교체됨으로써 예견된 바 있다. 이는 대의원선거가 1990년 4월 이후 8년만에 열렸다는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교체율 31%와 비

교할 때 대폭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부인사가 제9기 때의 57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한 것은 북한이 군부중시의 정치를 지속할 것임을 나타내 준다.

국가기구가 정상화된 데 반해서 당기구는 아직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5년마다 개최되어야 할 당대회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제6기 21차회의 이후 소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금번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대폭적인 내각인사가 있었지만, 당에 대한 인사는 금년에도 없었다. 현재 공식중인 자리만도 당중앙군사위원장, 당중앙검사위원장, 당중앙검열위원장 등과 다수의 정치국원 등이 있으며, 국제비서 황장엽의 망명, 농업비서 서관희의 총살, 교육비서 최태복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선출 등으로 다수의 비서자리도 공식 중인 상태이다.

김정일의 공식 승계에 즈음하여, 북한은 8월 22일자 「로동신문」의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을 김정일 시대의 국가 슬로건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사후 4년 동안 과도기적 슬로건으로 내세워 온 ‘고난의 행군’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상강국 및 군대강국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요한 정치적 계기에 새로운 구호를 제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성대국론」은 김일성 사후 사용되었던 ‘고난의 행군’, ‘붉은기철학’과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이념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이 주창하였던 주체사상의 명제들 — 사회정치적 생명체, 우리식 사회주의 등 — 에 대한 주장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이념의 비중이 주체사상의 고전적 명제들에서 국면전환용 슬로건들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 당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이 새롭게 정비되고 공석 중인 직책들이 채워지겠지만 정치국, 비서국과 같은 회의기구가 김일성 시대처럼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권력행사와 통치행태가 매우 개인화됨으로써 인적 통치가 제도적 통치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정일은 당내 협의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직할 통치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동향

북한은 「당보, 군보 공동사설」(’98.1.1)에서 “경제건설은 우리가 새해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의 발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특히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와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자문제 해결과 이모작 농사를 강화하는 녹색혁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완충기 경제전략의 하나로서 강조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했던 무역체일주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체적인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소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7년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P 기준)는 177억 달러, 1인당 GNP는 741달러로 1996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이

러한 현상은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규모를 한국 원화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인 하기도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1997년 실질GNP는 실제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실질GNP 기준)은 -6.8%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경제후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1998년에도 산업가동률의 저하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곡물생산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증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상GNP(억달러)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인당GNP(달러)	1,064	1,038	943	904	923	957	910	741
실질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4.5	-3.7	-6.8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년도;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1998년도 북한의 대내 경제동향을 재정, 건설, 농업, 광·공업, 수송·통신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 저하로 재정수입의 원천인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이 감소하여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재정규율 이완현상, 예산낭비 및 누수현상으로 경제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95년 이래 예산·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파악할 수 있다.

건설부문에서는 대규모 경제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형발전소는 연내 건설

목표 600여개를 5월까지 이미 완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건설목표를 1,200여개로 확대·조정하였다. 완공된 중·소형발전소에는 부남청년발전소(자강도 화평군)도 포함되어 있다. 고원광산(함남 고원군·금야군 소재로 금 및 사금광산으로 추측), 강계기와공장, 평남지역에 다수의 중·소규모 화학공장 등이 새로 개발, 완공 또는 조업중에 있으며 이 밖에 금야염전(함남 금야군)이 완공단계에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차인석(북한 농업성 농산국장)은 올해 곡물 수확량이 283만t이며 여전히 흉작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이 발표한 1997년 곡물생산량 269만t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국제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1998년 곡물생산량을 1997년의 266.3만t보다 30% 증가된 341.8만t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북한이 금년도 작황을 흉작이라고 한 것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요청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발언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총곡물수요량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광공업부문에서는 위탁가공생산마저 감소하는 등 생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 한국 등과의 위탁가공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도 상반기 북한의 대일본 섬유류 수출실적은 1997년도 상반기 대비 27.4% 감소한 2,800만 달러, 1998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 실적은 1997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은 평균 25%에서 20%로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수송·통신부문에서는 평양-신의주간 광케이블 공사, 청진항 서항 콘테이너 부두 공사 등이 완공되었으며, 평양-남포간 새로운 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1997년에는 대외무역 총액이 21.8억 달러(수출 9.1억 달러, 수입 12.7억 달러)로 1996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1998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의 대외무역액은 1997년 대비 약 13.3% 감소한 7.5억달러(수출은 13.3% 감소한 2.6억달러, 수입은 13.2% 감소한 4.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단위: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무역규모	47.2	27.2	26.6	26.4	21.1	20.5	19.8	21.8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7.3	9.1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12.7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년도.

북한은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98.9.5)하면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민에 대한 거주·여행의 자유 부여 등이다. 경제관련 개정 조항들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준비 및 정책방향 예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북한경제의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한편 북한은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9.17)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를 발표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고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설의 주요 내용은 경제보다는 정치우선 논리를 견지한 가운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정당성 강조, 외세 의존경제 및 세계경제 일체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 표출과 함께 북한식 경제노선의 고수 주장 등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실리에 근거한 신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헌법 개정과 자립경제 고수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보다 실용적이고 개혁·개방지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계기로 호주 등 각국에 경제전문가를 파견해 시장경제 연구에 착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농민에게 농지의 일부 소유를 허용하고 그곳에서 재배된 곡물을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칠보산 일대 개발과 관광사업 확대 등 추가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년 북한경제는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관련 헌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 제한적인 경제개방 확대, 체제유지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북한의 경제상황은 헌법 개정에서 나타난 경제부문의 변화가 경제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과 유사한 북한식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현실적응적 경제개혁과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하는 북한식 개혁·개방을 생존전략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생산책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부문에서는 북한식 구조조정을 단행하

여 경공업제품,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에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크게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8·3인민소비품' 생산근로자를 계획경제부문에서 분리하여 비공식부문의 생산을 적극 장려할 것이다.

유통·소비부문에서는 사적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농민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별로 소규모 상설시장이 등장할 것이다. 국가는 배급·공급제도를 축소하고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일부를 수매할 것이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물류증개 및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동향

극심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시작한 1998년 북한은 식량난으로 야기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사상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선전선동을 전개하고, 새롭게 제시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대중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도 근로자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강행군'에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직능별 사회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청년동맹」 제8기 14차 전원회의(1.23~25), 「직맹」 제7기 36차 전원회의(4.22), 「농근맹」 제7기 32차(3.8) 및 33차(4.22) 전원회의, 여맹 제5기 28차 전원회의(4.25) 등을 개최하는 한편, 9월에는 각 단체의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제난으로 이완된 주민들의 사상강화를 촉구하였다. 또 단체의 간부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출범에 대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1998년에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한층 강화하였다. 예년과 달리 신년공동사설에서 「청년보」가 누락된 사실이 시사하듯이 식량난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청년동맹 등 조직생활과 학습활동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학생들의 사상교육 배가를 위한 「영웅을 키워낸 학교 교장·담임교원 회의」(8.1~2), 10만명이 참가한 「전국청년 사회주의 총진군대회」(2.6~7), 김정일의 자강도 회천시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궤기모임」(6.22) 및 제8기 15차 전원회의(12.1)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1998년 한해를 '대학생 사상교양의 해'로 설정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체육경기대회(10.14~11.3)를 비롯하여 각종 사상사업을 전개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북한은 '영웅칭호'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등 사회통합을 시도하였다. 올해에는 특히 과학기술자 등 지식인에 대한 포상과 사상교양 독려가 두드러졌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자·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교수, 교원 등 지식인들에게 박사, 교수 및 학사 학위를 수여(2.11)하고, 평명성1호 로켓발사에 참여한 과학기술자 160명에게 국가표창과 학위학직을 수여(11.30)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자 하였다.

한편,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합리

화하는 선전활동과 반미교양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중앙방송」(1.20)은 세계각국이 '엘니뇨 현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민주조선(10.28)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과 이로 인한 유아사망률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함으로써 당면한 농정의 실패가 인재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변동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으로 합리화하여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영아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37년만에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개최(9.28~29)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낳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반미교양사업을 전개하여 반미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미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김정일은 신천 전쟁박물관(11.22)을 방문하고 근로자들과 군인, 청소년 등을 더 많이 동원, 참관하여 반미의식, 계급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군참모부 대변인성명(12.2) 발표 이후에는 대미성토 군중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정권수립 50주년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김정일 취임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예년보다 2개월 가량 빨리 7월 15일부터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달리기」를 전개하는가 하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와 민족주의 노선 선전, 남한체제 비판 등을 통한 체제강화는 1998년에도 지속되었다. 「태양절 중앙보고대회」(4.14)에서는 「태양국」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도입하였고, 발해에 관한 유물 전시(7.4), 학술발표회(7.14~15)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해국의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함으로써 북한의 역사적 정당성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남한의 IMF체제를 비난함으로써 북한의 자립

노선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하고 대내적인 결속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에 대한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제의 와해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0~3,000명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통제의 기제가 약화되었음을 반증한다. 물물교환을 위한 국내이동도 부쩍 늘어났으며, 특히 빈곤계층주민은 주택 및 기타 생계수단을 처분하고 유민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야 할 해로 규정하고 '강계정신'으로 분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식량배급의 불투명, 주민이동의 증대, 탈북자 증가, 개방분위기 확산 등으로 사회적 응집력과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주이동·여행 등 주민유동성의 증대는 북한주민의 사상적 응집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직생활과 학습생활을 부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 등으로 국제기구 및 남한주민과의 접촉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개방지역인 나진·선봉과 자력생산을 근간으로 한 북한내부 체제와의 비교인식도 생성되고 있어, 이미 사상적 동요가 일고 있는 청년·지식층에서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비판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군사동향

1998년에도 북한의 군사력 증강노력이 지속되었으나 경제력 저하로 인하여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은 재래식 전력증강을 약간 약화시킨 반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강화

함으로써 경제력 저하로 인한 대남 군사역량 열세 가능성 극복과 대외적 협상수단 강화를 시도해왔다.

실제로 재래식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것은 없으나 상어급 잠수함 및 공기부양정의 추가 건조, MI 계열 헬기에 대한 로켓포 발사대 장착 및 AN-2기의 추가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주로 기습침투 및 속전속결형 전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기습침투 남침전략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군사배치 측면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전방지역 전진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제공격 및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지상군이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도 즉각 공격이 가능한 군사준비상태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에 대한 중·서부지역의 증강배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동부지역의 증강배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FROG 미사일 연대의 여단증편 및 SCUD 미사일의 증강배치와 노동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훈련은 소규모 기동훈련, 지휘소 훈련 등 '자원절약형' 군사훈련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특수전부대 훈련량과 해군의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기습상륙훈련 등이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1997년에 이어 1998년 3월에 15일간 「민·관·군통합국가급」 전시전환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전년도와는 달리 동 훈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고 훈련이 다소 연장되었다. 동 훈련의 공개는 지난 8월 31일의 로켓발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역량과 군사적 준비태세를 대외적으로 시위하여 대외적 협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동원능력과 후방방호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대남 정보수집활동과 지하세력 확장,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대남침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예비전력 증가 및 군사진지 구축을 중점과업으로 선정하여 군사·산업시설의 지하화 지속 및 동·서해안에 2중철조망과 석축을 이용한 복합장애물을 증설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은 8,236개소로 총연장 547km에 달한다. 지난 6월 22일 속초해안 유고급 잠수정 침투와 7월 22일 동해무장간첩 사체발견 등은 북한의 대남침투활동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 8월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적 구호를 제시하고 「강성대국」의 위용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군사강국 이미지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사강국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 북한은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정신적 군사역량 강화를 독려해오고 있다. 북한은 군사중시를 기반으로 군대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군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사상의 강군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사상교육은 김정일의 군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대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시위할 수 있는 전략무기체계 개발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및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는 이러한 대내외적 과시효과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협상지위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개발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주민들에게 강대국 이미지를 인식시켜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8월 31일 대포동에서 행해진 로켓발

사를 북한은 “첫 인공지구위성”시험 성공으로 선전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은 울렸다”고 주장한 것은 미사일기술 과시를 통한 강대국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 개발능력의 지속적인 과시를 통해서 대미, 대남협상에서의 지렛대로 확보하고자 한다.

요컨대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강군건설이 필수적이며 강군건설은 두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상의 강군건설을 독려함으로써 군대를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정권보위 전위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하는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강대국 환상을, 대외적으로는 대미협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에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군사력 증강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대의 사상통제 또한 강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군사동원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외적 위협 강조와 함께 민·관·군통합 전시전환훈련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대남침투활동 역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대외동향

가. 북·미관계

1998년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 경제난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

북 경제제재조치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대미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로켓 발사, 제네바 합의문과기 위협 등 '벼랑끝 전술'을 병행하였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였다. 특히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긴밀한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발사, 지하핵시설 문제 등이 불거진 8월 이전에는 북·미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비록 3월 16~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 제2차 본회담은 북한측의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문제 우선 토의 주장으로 성과없이 끝났지만, 북한과 미국은 이에 앞서 베를린에서 고위급 회담(3.13)을 열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협상 재개, 한국전 실종미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4월에는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공동 발굴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주한미군은 2월 북한에게 1991년 이후 중단된 장성급회담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6월 23일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접촉이 7년만에 재개되었다. 장성급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에서 북한은 한국측 대표에게도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자는 미국측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8월 북한이 금창리에 핵시설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북·미관계는 긴장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더욱이 8월 3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급증하였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중유지원의 전면 삭감을 결의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나타내었다. 결국 10월 미 의회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을 원하는 클린턴 행정부와 의 타협을 통해 대북 중유 공급을 허용하되, 3,500만 달러의 대북지원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합의 이행, 미사일 규제 등에서의 진전, 그리고 북한정책 조정관의 임명 등을 요구하였다. 미국의외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10.7)을 보내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북한은 미 의회에서의 대북지원금액 삭감 움직임 등과 관련, 미국이 「북·미 기본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북·미고위급회담 등에 응하며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보다 많은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내의 대북 강경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 및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의 기본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핵동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미관계 자체가 악화되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강경책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자제하는 데는 한미공조 하에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 같은 대화 지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뉴욕에서 진행된 고위급회담(8.21~9.5)을 통해 핵동결 합의 이행, 4자회담 및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지하 핵의혹시설 건설 문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개최된 각 사안별 회담에서 북한은 대화는 지속하면서도 온건과 강경노선을 반복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하였다.

우선 북한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회담(9.28)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등을 논의하였다. 미국측은 이 회담에서 북한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항공기, 해상테러 방지 등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요구중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북·미 미사일 회담(10.1~2)에서도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 대북 경제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생산 및 실전배치는 자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외화획득 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미국에 전달하였다.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 3차 본회담(10.21~24)에서 북한은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우선 의제를 선정하고(북미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철수) 분과위를 구성하자는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2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모든 지하시설은 민수용이며, 이에 대한 사찰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도 북한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북·미 제네바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였다. 이는 미의회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양에서 열린 미국의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간의 회담(11.16~18)은 결국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보상이 있을 경우 사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후속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도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북한의 대미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추구하되,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미 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4년 제네바합의의 경우와 같이 일괄타결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외교협회가 포괄적인 대북 협상수단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대북협상을 총괄 조종할 대북정책 조정관(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임명되었으며,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미 현안의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나. 북·중관계

1998년에도 중국은 막대한 전략물자를 제공하여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대중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간에는 의례적인 축전교환과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이외에 특기할 만한 교류와 접촉이 없었다.

1998년은 북한 건국 5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였지만 북·중간에는 최고위급 지도자간 교류가 없었으며, 자오난치(趙南起)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리청런(李成仁) 중국공산당 당대외연락부 부부장 그리고 송광카이(熊光楷) 중국군 부총참모장의 방북 정도가 양국간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지도자 교류였다.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중국 9기 전인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북한 건국기념일, 중국정부 수립 기념일 등에 상호 축전을 교환하여 전통우호협력관계를 대를 이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김대중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 '21세기의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9월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핵사찰 요구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장완니엔(張萬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코언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중국도 위협을 느낀

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회적으로 비난(9.15)하였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문제도 북·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행사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확산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북·중간에 국제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와 지원성 수출 및 변경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98년 중국의 대북 공개 식량지원 규모는 10만t으로 전년도(15만t)에 비해 33% 감소되었으나, 대신 중국은 2만t의 화학비료와 8만t의 원유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1998년 북·중간 변경무역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도(9.20)되었다. 1월부터 8월까지 단동-신의주 루트를 경유한 변경무역 규모가 약 2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중국내 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30만 t의 식량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게 대규모의 식량과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안정유지와 대북 영향력 유지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두만강지역 「국경수역 분계선 확정협정」을 체결(11.3)하였는 바, 앞으로 3국은 두만강지역 수역분계

선 위치확정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가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고 있고 북한 김정일이 중국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999년에도 북·중간 정치 관계가 한·중수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중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이 김정일의 방중을 강력하게 희망할 것이나, 김정일의 외국지도자 접촉 기피증으로 북·중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장쩌민 주석이 미, 일 정상에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확산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 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경우 북·중관계가 미묘하게 전개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으로 상대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1999년에도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바, 북한 체제유지 지원을 위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심각한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대북 경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지원금 감소로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대북 출혈성 수출을 지속하기가 곤란하고, 북한경제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중간 경제교류의 대폭적인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98년 대홍수로 중국의 추곡생산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1999년 전반기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감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 북·일관계

1998년의 북·일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악의 상태라고 할만큼 악화되었다. 작년 양국은 외무부 심의관급 접촉(8.21~22)에서 수교협상 본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이 방일(11.8~14)한 데 이어 고향방문 사업을 총 6회 추진하기로 합의(12.12)했기 때문에 1998년의 양국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이 성사된 것은 북·일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목적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의 대북인식을 개선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량 및 경제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었고, 일본은 대북채널을 확보하여 일본인 납치의혹 진상규명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수교교섭 재개를 지지하는 여론도 조성해 보려고 했다.

이러한 이해의 일치로 1998년초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2진 12명의 일본방문(1.27~2.2)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고향방문사업이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북측 방문단장 박명옥은 제3진의 고향방문을 위한 「적십자연락협의회」의 조기 개최를 요청(2.1)했고 일본측은 고향방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자회견 이외 친지방문 등을 비공개함으로써 기자들의 개인적 접근을 가급적 제한했다. 이는 1차 방문시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의 소란과 보수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북한이 북한적십자회 대변인 명의의 비난 담화를 발표(1.10)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이 고향방문 사업에서의 북측 태도, 방문단 규모, 비용부담, 일본인 납치의혹 등을 비판적으로 거론하면서 북·일관계는 마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납치의혹 해소 문제

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1997년 하반기 일본 내에서 일본인 납치의혹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일본정부가 북한에게 일본인 납치의혹(7차례 10인) 해소를 강력히 촉구('97.12.11~12)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양국 과장급 비공식 접촉시(98.1) 제시한 수명의 명단이 일본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과 불일치하여 일본내 대북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납치의혹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수교협상 재개는 있을 수 없다”(2.6 오부치 외상)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본의 태도가 강경해지자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측이 합의를 뒤집어엮고 근거도 없는 행불자문제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와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2.11)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자민당 대표 7명이 북한 식량사정 조사 및 농업기술 제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3.28~31)하였는데, 이 대표단의 목적은 공식적 목적 이외 수교협상 재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납치의혹 해소를 위한 양국간 입장 조정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표단 방북시 북한의 김용순이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과 납치의혹 문제 해결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의 신빙성은 북한이 「로동신문」 논평(5.8)에서 수교회담 개최 지연에 대해 “일본이 회담 재개 용의가 없다면 우리도 구태여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중앙방송」(5.18)이 수교문제에 관해 일본을 비난하는 주창준 주중대사의 기자회견(5.14, 베이징) 내용을 보도한 데서 증명되었다. 주창준은 남한의 청탁과 압력을 받아 있지도 않은 납치의혹 해결을 회담의 전제조건화한 일본측의 태도때문에 수교회담 본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관계는 납치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일본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적십자회가 “북한내 일본인 행불자 부재”라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6.5)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일본은 총리(6.5), 관방장관(6.5), 외무차관(6.8) 등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교교섭과 식량원조 문제 등에서 당분간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북한도 북한적십자회 대변인 담화(6.7)를 통해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의 중단을 시사하면서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6.9 「중앙방송」)하는 한편, 외교부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회견(6.11),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6.18), 「아시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대변인 성명(6.20),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의 고소장 발표(6.22) 등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대일비난은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에 대한 일본 적십자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십자회」 대변인 담화(6.24), 종래와 달리 대미 비난 일본도에서 일본을 “조선전쟁의 공범자”로 비판한 「중앙방송」(6.25), 일본의 핵보유 야망을 지적한 「로동신문」 논평(6.26), 일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에 대해 “침략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로동신문」 논평(8.12)에서 계속되었다.

1998년 중반에 올수록 한층 강화된 북한의 대일비난과 일본의 대북 강경자세로 험악해진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린 것은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8.31)였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 문제제기, 북·일 수교교섭 및 대북 식량지원 유보, KEDO분담금 합의서 서명 보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검토 등을 결정(9.1)하고 평양왕래 직항전세기 운항중지(9.2), 참의원 대북항의 결의문 채택(9.3)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뒤에도 일본의 고무라 외상은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9.8)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북한도 신문·방송 논평, 사회단체 성명, 각계 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였다. 즉 「아태평화위」 성명(9.2),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대변인 담화(9.8), 외무성 대변인 성명(9.15), 「로동신문」 논평(9.18; 9.22),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성명(9.18) 등에서 격렬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대일 반감을 표출했으며 '일본이 적대행위에 매달리는 한 일본과는 절대로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적이고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일본에서 대북 강경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은 한·일어업협정의 타결(9.25)에 대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10.1), 미·일이 전역미사일방위(TMD)체계를 위한 공동기술 연구에 합의한 데 대한 「로동신문」 논평(10.6)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난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10.25)을 통해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를 트집잡아 전례없이 조총련과 재일동포를 악랄히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는 일본에서 대북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비방과 항의가 지속되는 데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었다. 북한은 「조국전선중앙위」 성명(10.26), 「로동신문」 논평(10.27), 「직총중앙위」 성명(10.29)을 통해 일본의 처사를 비난하는 한편 평양(10.29), 남포(10.31), 원산(11.2) 등지에서 대일규탄 군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일본측의 '비인도성'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의 우익 보수세력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총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도 북한은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할 수 없다는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 「로동신문」 논평(11.17, 11.28, 12.7)과 외무성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회견(11.30) 등에서 일본을 ‘백년숙적’으로 극렬 비난하면서 일본과 “어떤 협상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북·일관계 개선의 관건인 납치의혹 해소 문제에서 북한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일본내 대북여론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의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북·미관계의 개선 여하에 따라서 북·일관계도 점진적인 개선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라. 북·러관계

1998년 북·러관계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관계개선의 추이를 이어갔으나 특기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심의 대상이던 북한과 러시아의 신 조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경제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러신조약과 관련, 1998년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당시 외무장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현총리)의 평양방문은 러시아의 국내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나, 정치외교분야 관계개선추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97년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쌍무협의를 진행, 북·러신조약체결에 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문제의 해결전망 및 대북 인도주의 원조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평양, 3.10~14). 북한-러시아 외무부간 상호 방문 계획에 따라 양국 외무부 국장급 회의가 예정(모스크바, '98.12.30~'99.1.1)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신조약 준비상황,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및 한반도내 안보 및 안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부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6.3). 또한 한국정부가 최덕근 주블라디보스톡 영사피살사건에 대해 북한개입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사건으로 결론지은 것(9.30)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배려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로켓발사 실험에 많게는 2천명, 적게는 수백명의 러시아 기술자가 깊이 관여했음이 보도되었으며(9.23), 다른 주변국들의 신중한 반응과 달리 러시아 우주관측센터가 로켓 발사직후 궤도에 올라간 인공위성을 확인했다고 발표(9.5)하는 등 북한측의 주장에 동조한 점도 최근의 북·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8년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방에는 2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임산업과 농업 및 어로가공, 건설 부문 등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국영농장의 야채재배·양돈업·가공업 부문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고, 해운사업부문에서는 낡은 러시아 선박의 해체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해역에서 채취된 원료들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러시아의 해산물 가공선박 비오네르 블라디보스톡호가 해주항에 정박함으로써(4.27),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수산물 가공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러시아 해산물 가공선박 지원은 지난해의 북·러어업공동위원회 11차 회의 합의(블라디보스톡, '97.10)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당시 북한해역에서 다시마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러시아는 6천t급의 가공

선을 제공키로 합의했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쿠릴열도에서의 어로를 허용했으며, 평양에서 북·러어업공동위원회 12차회의(11.18~25)가 진행되는 등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의 1차 의정서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간의 과학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조인(평양, 5.8)되었으며, 북한측에서는 과학기술위원장 최희정이, 러시아측에서는 겐나디 세레센코 과학기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과학기술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북한 금속공업부와 러시아 석탄수출회사 Merkuri 사간에 김책제철소에 대한 코크스탄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책제철소 현대화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모스크바, 4.3). 또한 북한 평양시의 주된 전력 공급원인 평양 화력발전소 재건설에 러시아 기술진이 참여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평양, 7.3).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운수상설분과 제2차회의’ 협상에서는 수송량 증대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문제 등이 협의되었으며, 의정서가 조인(평양, 7.7)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여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식량·연료·약품난에 시달리고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3.3), 정부에 전달했으며, 연해주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식량 등 원조물자 60여t을 북한측에 전달했으며(4.30),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조물자 공급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1999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러 신조약과 관련, 지속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며 1999년중 체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은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

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의 대북한 자세변화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함으로써 약화된 대북영향력의 회복과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노리고 있으며,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군사적 원조를 이용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부지원의 확대, 한국과의 교섭력 증대, 그리고 대미·대일관계 개선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중요한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99년도 북·러관계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계개선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 대남동향

1998년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서 '당국간 대화 회피, 비당국간 대화 확대' 전략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민족대단결' 및 '자주'를 내세운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해 '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하였으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였다. 2월에는 「정당·단체 연합회의」(2.18)를 통해 대북 유화정책을 기대하는 편지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새정부 출범 한달 평가(3.28 「로동신문」, 사설)에서 북한이 바라는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조짐이 없었던 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

는 등 관망적 자세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않았다.

북한은 4월 그 동안 남한 당국과의 접촉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어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당국대표(차관급)회담’(4.11~17)에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한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토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먼저 비료지원에 합의한 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베이징회담은 결렬되었고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는 재개되지 못하였다.

베이징비료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새정부 출범초기 자제하는 듯하던 대남비방·선동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새정부 출범 두달에 즈음한 평가(4.28 「평양방송」)에서 “전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강도를 보다 높였으며, 5월 이후 한국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며, ‘파쇼정권’, ‘반인민적 정권’등으로 비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괴뢰통치배’, ‘파쇼강패’, ‘사대매국노’ 등 원색적 비난을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은 6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체제가 강화되자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구걸행각’, ‘사대매국 행각’, ‘분열행각’ 등으로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대북 제의에 대해 「공개질문장」(8.20) 발표를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한편 한국의 통일안보정책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남비방 강도를 높이고, 남북 당국간 접촉을 회피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베이징회담 등을 통해 한국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 기조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특히 ‘상호주의’, ‘햇볕정책’ 등을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상호주의’ 원칙을 ‘전형적 장사꾼의 논리’, ‘반민족적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로 비난하며 ‘상호주의’ 원

칙 하에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햇볕정책'을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해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둘째, 김정일 정권은 체제위기가 계속되는 한 남한정부를 지속적으로 「주적화(主敵化)」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를 '외세에 예속된 정권'으로 매도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4·18 서한」을 통해 ①민족자주의 원칙 ②애국애족의 온 민족 단결 ③북남관계 개선 ④외세·반통일세력 반대 ⑤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선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국간 대화재개는 회피하면서도 민간차원의 교류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방북 및 북한 고려성균관과의 자매결연(4.28~5.5), 리틀엔젤스단의 평양공연(5.2~12), 연변과기대의 나진과기대 설립(6.5), 윤이상통일음악회 개최(11.3~5), 종교인 및 언론기관의 방북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6월 민간부문 접촉·대화추진 목적의 「민족화해협의회」를 결성(6.8)하고 판문점에서의 「8.15 통일 대축전」 행사 개최를 제의(6.10)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통일대축전」 수용의사 편지를 보내자 이를 거부(6.22)하는 한편, 통일부가 민간단체 행사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6월 한국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켰으며, 김정일이 정주영 회장을 면담,

대북 투자를 직접 보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남한 당국의 간섭을 비난(9.1)하였으며, 소떼 폐사 논쟁을 통해서도 남북교류에서 남한 당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북한은 민간교류와 함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6.22, 7.12),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8.31)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이중 전략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 「통일대축전」 제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주’ 및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민족대통일전선’ 구축을 추구하였다. 북한이 민족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한의 IMF상황을 활용하여 남한의 ‘대외 예속’을 왜곡 선전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한과 주변국과의 협조체제, 특히 한·미 공조체제에 ‘민족’을 앞세워 대응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한·미를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민간부분에서의 교류·협력에 치중하며, 남한 당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도에도 북한은 당국자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얻으려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또한 남한내의 정치적 혼란 조성을 통해 사회분열을 꾀하는 한편, 한·미를 이간시킴으로써 남한정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정부 배제전략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민간교류를 통한 대북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국간 접촉을 통해서만 대규모 대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우선시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셋째,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록 결국 당국

자간 접촉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김정일이 그 동안 금강산 개발사업 등 대남 교류를 주도한 김용순을 북한의 대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Ⅲ. 남북한 관계

1999년 남북한관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先) 대미, 후(後) 대남관계 개선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국 배제, 민간 접촉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지속될 것이나, 경제적 실리 확대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증가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당국간 대화도 진전될 것이다.

1. 남북대화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에 의해 남북공존의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은 분단상황의 관리와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해서 대북압박정책보다는 호혜적인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남도발 불허, 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경협활성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협력, 민간의 대북접촉 및 협력의 다원화 등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런 배경하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98.4.11~4.17)은 김대중정부가 등장한 이후 처음 열린 남북회담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관심을 끌었다. 이 회담에는 남한의 통일부 차관과 북한의 정무원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각 5명의 남북한 대표가 참가하였다. 남

북한은 3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남한이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를 병행 합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은 비료지원문제를 우선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회담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특히 남한은 상호주의에 의해 비료지원문제와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침하에 남한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적십자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만t의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인 비료지원문제를 정치문제인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남한이 천명한 「정경분리원칙」과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북한은 비료지원에 대해서 우선 합의한 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의 추후 적십자대표접촉에서 다른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입장차이로 인해 3년 9개월만에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은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남한은 상호주의가 남북한의 신뢰조성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은 상호주의는 각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자결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은 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면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북한은 이 회담을 비료지원이라는 특정사안에 관련된 일회성 회담으로 여긴 반면, 남한은 이 회담을 일회성 회담보다는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북한에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교환과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는 남북상설대화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특사교환은 남북한간 우선적 현안인 이산가족문제, 남북 경제협활성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상설대화기구는 농업협력, 에너지협력, 환경협력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8·15 제안」에 대한 공개질문을 제기하여 이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공개질문에서 미군주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상호주의와 햇볕론, 한·미합동군사훈련,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을 비판함으로써 북한이 단기간내에 남북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한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은 1차 본회담(97.12.9~10)의 합의에 따라 뉴욕 실무협의를(98.2.6)를 거쳐 2차 본회담(98.3.16~21)이 열렸다. 그러나 동 회담에서 한·미의 '선(先) 분과위'(평화체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구성과 북한의 '선(先) 세부의제'(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확정 주장이 대립되어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이후 지연되던 4자회담은 미·북 뉴욕 고위급회담(98.8.21~9.5)에서의 합의에 따라 3차 본회담(98.10.21~24)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2개 분과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긴장완화) 구성, 4차 본회담 일정(99.1.18~22),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채택 등 '공동 발표문'이 합의·발표되었다.

북한이 3차 본회담에 참여한 이유는 지하핵시설 의혹 및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고조된 미국내 대북강경 여론의 완화, 미국의 식량지원(밀 30만톤)에 대한 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하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 미·북관계의 교착국면 타개 등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3차 본회담에서 한·미의 '선(先) 분과위 구성, 후(後) 의제 논의'에 합의한 이유는 중국의 한·미 입장지지, 한·미의 주한미군문제 '논의' 가능성 제시 등과 함께 미국이 고위급 관리(Charles Kartman 평화회담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남북한관계의 최대 이슈는 당국간 회담 재개와 4자회담의 진전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과 경협을 기대하고 있지만, 남북협력에 수반될 개방 여파를 차단하고 남북긴장 유지를 통해 체제위기를 관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 차원에서 민간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는 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비료지원, 경협사업 지원 등과 관련한 특정회담이 당국간에 개최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북·미간 일괄타결이 시도될 경우,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반관반민' 단체나, 「민화협」에 소속된 민간단체들을 통해 비당국간 대화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

한편 1999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4자회담 제4차 본회담의 핵심 현안은 분과위 구성을 매듭짓는 일이다.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회담운영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9년도에는 4자회담 분과위원회가 구성·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2. 경수로사업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1997년 8월부터 부지정지와 임시숙소 건설 등을 위한 경수로사업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일괄도급 방식에 의한 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부지정지공사 기간은 1년이었으나, 재원분담 협상 지연에 따른 KEDO-한국전력공사간 주계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본공사 착수가 늦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KEDO는 공사기간을 1998년 10월 15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일본 등이 재원분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다시 1999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더 연장된 상태이다.

부지공사는 숙소, 식당, 사무실,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일부 부지정지 사업으로서 총공사의 1/5에 해당되며, 공사시작 1년여가 지난 현재 초기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 약 3만 4천t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었으며, 남한측 근로자 150여명과 북측 근로자 100여명이 공동작업을 진행중이다. 부지공사 비용으로 한국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4,5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나, 1998년 10월 15일부터 1999년 1월 15일까지의 연장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자신용방식'(외상)으로 약 85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1999년 6월 30일까지 KEDO집행이사국의 기여금으로 상환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사업의 중단없는 추진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도 재원분담 협상에 마침내 서명함으로써 북한이 핵시설 의혹을 해소하는 한 전반적인 국내의 기류는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KEDO-한국전력공사간의 주계약

과 KEDO-한·일간의 차관공여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

그 동안 경수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경수로 사업의 최대 현안문제가 되었다. 한국은 국내 경제사정과 경수로 사업에서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경수로 사업의 총 예상비용은 제네바 핵합의 당시 2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51억 7,85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97.11.25). 그러나 한·미·일·EU 등 KEDO 집행이사국은 한국의 IMF 관리체제하 환율상승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46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1998년 8월 31일 정식 서명·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던 동 합의는 그러나 서명 당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일본 등 일부 집행이사국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이 유보되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매우 경악한 반응을 보여 북·일 수교교섭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 동결 등으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고하며 경수로사업 재정분담 서명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설득으로 일본은 10월 21일 서명을 완료하였다.

11월 9일 KEDO 집행이사국은 대북 경수로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당 1,100원 및 물가상승률 연 2.1%)로 확정하는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경수로사업비의 재원분담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에 의거하여 실제공사비의 70%를 원화로 기여하고, 일본은 1,165억엔(10억달러)을 정액으로 기여하며,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EU는 7,500만 ECU를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70%를 정률 부담하되, 이를 '최대부담액'으로 명기하여 추가 부담액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연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로켓발사로 인해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 하원은 1998년 9월 17일 대북 중유공급 예산 3,5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하였으나, 1998년 10월 15일 클린턴 행정부와 1999회계년도 예산 협상 타결 과정에서 동 예산을 부활시킨 바 있다. 다만, 미의회는 지하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즉 예산을 1999년 3월 1일 부터 사용하되 6월 1일 이전에 1,500만 달러를, 6월 1일 이후에 2,000만 달러를 각각 사용하고, 북·미 체내바 합의 이행,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저지를 위한 만족할만한 성과 등의 조건을 미행정부가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의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의정서 협상을 벌여, 현재까지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수」, 「서비스이용」, 「미지급시 조치」 등 6개의 의정서 체결을 완료하였다. 향후 체결해야 할 의정서로서는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 「핵사고시 책임」, 「상환조건」, 「핵안전」, 「사용후연료」 등 7개가 남아 있으며, KEDO는 본 공사를 위한 주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 의정서를 우선 체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훈련」 의정서는 금년에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로켓발사로 보류되었다. 한편, KEDO와 북한은 고위급 실무협약('98.5.5~9)을 갖고 경수로 후속의정서 협상일정, KEDO인원의 해상출입 절차, 신포의 은행서비스 개선방안, 경수로부지 공사 근로자들의 인근 휴양지 방문 문제 등 현안들과 향후 공사 일정을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뉴욕에서 「품질보증」 의정서 제3차 협상(8.10~27)을 개최하였다.

향후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진전에는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여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한핵 투

명성 확보와 미사일 개발 중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핵·미사일을 외교적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 양측간 지속적인 접촉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북·미간에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경수로사업은 보다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현대그룹과의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 여타 남북관계의 현안문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 한반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의회 내에서 보수 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제네바핵합의의 유용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의 필요성도 주장되고 있다. 만약 북·미협상의 결렬로 경수로사업이 중단된다면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회부와 대북제재 재개 뿐만 아니라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게 되어 한반도는 또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다만, 지난 수년간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핵의 동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왔고, 최근 북한 영변 인근의 대규모 지하공사에 대한 핵의혹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어왔으며, 한반도 주변 관련 당사국이 경수로사업의 중단이 초래할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들에서 일시적인 의견대립과 사업의 정체가 있더라도 대북 경수로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류·협력분야

가. 경제분야

1998년의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관계는 남한의 경제위기상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외화난과 내수위축에 따라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1998년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한 교역총액은 2억324만5천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2% 감소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중 반입(8,439만7천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53.9% 감소했다. 반입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외환위기에 따른 남한기업들의 자금여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반출(1억1,884만8천달러)은 오히려 5.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반출이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게 된 것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도 KEDO를 통한 중유 제공, 대북 경수로 건설 및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되었고, 특히 금강산 관광 및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장비 및 자재의 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은 「7·7 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989~1998년간 남북교역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매년 남북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1~1992년간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던 시점에 5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94년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1995년까지 또 다시 큰 폭의 증가율(47.7%)을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 남북교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반입액이 반출액보다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입과 반출간에 불균형현상이 나타나는 주요이유는 북한의 외

화난때문으로, 1997년까지 북한은 9억5,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셋째,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총반입 및 총반출에서 차지하는 위탁가공의 비중도 매년 증대되고 있다.

<표 3>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1989~1998년 (단위: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증가율(%)	
	금액	위탁가공	금액	위탁가공	금액	위탁가공	금액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	-
1990	12,278	-	1,188	-	13,466	-	-28.1	-
1991	105,719	-	5,547	-	111,266	-	726.3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55.9	-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7.6	736.3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4.3	266.2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47.7	78.8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2.3	62.1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22.3	6.3
소계	1,252,306	118,249	293,384	114,623	1,545,690	232,872		
1998	84,397	38,499	118,848	26,964	203,245	65,463	-31.2	-13.0
총계	1,336,702	156,748	412,232	141,587	1,748,935	298,355		

*주 1: '95년도 반출금액은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를 제외한 것임.

2: 증가율은 전년비 수치임.

3: 1998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임.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89호(1998.11.1~11.30), p. 42.

1998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4.30)에 따라 통일부가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데 기인한다. 「남북경협활성화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의 북한인 접촉 및 방북과 관련, 방북요건 구비시 승

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하는 동시에 협력사업자 승인시에 적용하였던 수시방북제도를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승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승인처리 기간도 접촉의 경우에는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의 경우에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둘째, 남북한간 교역과 관련, 정부는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을 폐지하였다.

셋째,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 정부는 투자규모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투자제한업종을 Negative List화하였다. 나아가 3백만 달러 이하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활성화 조치와 정경분리원칙의 일관된 추진에 따라 현대그룹이 추진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6월 16일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의 초청에 따라 소 500마리 및 소 운반트럭 50대와 함께 판문점을 경유,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서를 체결했다(6.22).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는 1차 합의 이후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관광객의 입산료 및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10.27~31)으로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판문점을 경유한 정주영 명예회장의 2차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북에서 거둔 현대측의 가장 큰 성과는 정 명예회장과 김정일간 면담이 성사(10.29)됨으로써 금강산 사업에 대한 북한측의 확실한 보증을 받게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 면담이 성사된 직후 양측은 「금강산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양 합의서 관련 5개의 부록(금강산관광사업지역,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 분쟁해결, 관광시설 투자 및 사업권, 관광대상), 그리고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민간급 체육,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사항 중 특기할 것은 2005년 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현대가 독점하며, 그 대가로 관광객 1인당 입산료 300달러를 포함하여 총 9억4,200만 달러를 분할 지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세금면제, 유선통신의 설치·이용,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 등 다양한 특혜조치를 약속했다. 양측의 최종합의에 따라 총 1,41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실은 금강호가 1차 출항(11.18)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의 막이 올랐다.

현대의 금강산 사업은 단순한 관광차원을 넘어 남북교류 및 경제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는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와 관련, 평양에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서해안지역 공단 개발, 고선박 해체사업, 평양화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및 자동차라디오 조립공장 건설, 통신사업, 제3국 해외건설공사 공동진출, 서해 유전개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가지 사업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통신사업과 관련, 현대전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온세통신에 대해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11.11)하였다.²⁾

2)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온정리와 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및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운영, 2단계는 남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 이래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1999년에도 최소한 현 수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상의 발전은 금강산사업을 발판으로 남북당국간에 대화통로를 개척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 하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금창리 핵의혹, 미사일문제 등으로 북·미갈등이 심화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금년도에는 남북간 민간차원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북한의 농업과학연구원과 「농업기술협력계약서」를 체결(5.16)하고, 국내 옥수수품종인 수원19호의 북한내 생산력검정시험, 정보당 소출이 10~14t 생산되는 최우량 옥수수품종(이른바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수원19호, 옥수수교잡종 2,500여종 등을 지원하여 시험재배한 결과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북한은 내년도에 시험재배 면적을 대폭 확장할 것과 종자 및 비료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두레마을은 북한의 라선경제협조회사와 「라선두레농업회사」를 설립하여 10만평의 시범농장과 1,000만평 규모의 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5.26)하였고, 인공씨감자 5.1t(40만개)과 비료 200t을

북간 통신회선 확충, 3단계는 금강산 관광지역내 이동통신망 구축이다. 현재 정부는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간 최종합의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2단계사업과 관련, 북한측과 세부사업계획이 협의 중에 있으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3단계 사업은 금강산지역의 종합개발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 장기적 사업으로서 향후 상황진전에 따라 추진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송출하여 시험재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공 씨감자와 비료의 지속적 지원, 인공씨감자 기술협력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두레마을은 삼원식품과 공동으로 나진·선봉시에 장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강원대학교도 5개년(1998~2002)간 총 23억원이 소요되는 남북 농업기술협력사업을 계획하고, 9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농업연구를 위한 컴퓨터 활용방안, 지역별 작부체계 개선·개발, 연료림 조성, 목초자원을 이용한 토지생력화 및 가축사육 기반조성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남북 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남북농발협」)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와 베이징에서 접촉(7.21~22)하고, 북한의 농업과학연구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향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다소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북한은 국제옥수수재단이 제안한 남북한 공동 식량안보 학술회의 개최, 북한 농업기술자의 해외연수 등을 시기상조라고 거부한 것으로, 두레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회사명과 회사의 경영 형태를 변경할 것과 우선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대학교가 향후 협력을 위해 제시한 농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남북농발협에 대해서는 선투자와 영농자재의 우선 지원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1999년도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국내의 민간단체가 어떻게 협의해 나가느냐에 따라 협력의 규모와 속도가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북 농업사업이 지원을 병행하는 협력사업이란 점에서 내년도에도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한기업들의 대북경협시 정부지원의 기대, 북한의 경협상대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는 점, 남한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제한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1999년에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경우, 금강산 관광개발과 관련한 대북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이므로 남북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 사회문화분야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발표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 경제교류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사회문화 교류는 현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89년 6월~1998년 11월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교육·학술 133건(1,700명), 종교 94건(727명), 문화·예술 68건(649명), 관광·수송 60건(214명), 언론·출판 45건(130명), 체육 40건(107명), 과학·환경 35건(241명)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의 경우(11월 31일 현재)에는 종교 35건, 문화·예술 27건, 학술 21건, 관광·수송 21건, 언론·출판 13건, 체육 9건, 과학·환경 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종교와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관광·수송분야의 증가는 금강산 사업의 영향이 컸다. 한편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협력사업자 승인 6건, 협력사업 승인 5건이 이루어졌다. 이는 1991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승인건수의 2/3에 해당된다.

사회문화분야에서 성사된 교류·협력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분야의 경우, 정부는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에 나진·선봉지역 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학술분야 최초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다(1.9). 동 사업의 기간은 개교일로부터 약 15년이며 후원회측이 교육·행정시설, 숙소 및 식당을 건설하고 북한측이 부지 및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 건설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예년과 같이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베이징, 2.20~21), '유네스코 동북아 5개국 국내위원회 회의참가 및 협력사업'(베이징, 3.27)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져 자매결연 등 협력사업이 성사됨으로써 과거보다 한층 더 진전된 교류·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북대학간 교류·협력의 첫 사례로 성균관대학의 정범진 총장이 방북하여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를 협의하였다(4.28~5.5). 장상홍(21세기 통일봉사단 사무총장) 등 3명도 '남북학술토론회' 개최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6.2~6.16).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문화방송이 방송사 최초로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등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 목적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3.13). 또한 한국문화재단(이사장 박보희)소속 리틀엔젤스 예술단 66명의 평양공연(5.2~12)은 분단 이후 첫 순수 민간예술단체의 북한공연 성사라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사진학회(회장 유경선)와 북한 조선사진작가동맹(위원장 허병석)의 2년여에 걸친 작업의 끝에 사진집 '백두에서 한라까지-렌즈로 본 조국'이 발간되어 서울에서 전시회가 개최(5.29~6.11)된 것은 남북 공동협력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되었다. 남한작가 20여명, 북한작가 46명이 참여한 동 사업에 양측은 책의 출판을 위해 베이징에서 두차례 회담하고 세차례에 걸쳐 교정지를 교환하였다.

종교분야의 경우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 등 위원 7명

이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5.15~22),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개신교의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의 김동완총무를 비롯한 대표단이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초청으로 방북(5.26~6.2)하여 북한 기독교대표단의 서울 방문과 나진·선봉지역의 교회건립 추진 등을 논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지덕대표회장 등이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금강산 온정리교회 복원과 원산 라면공장 지원 등을 협의하였다.

언론분야의 경우 특히 신문사들의 방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답사를 목적으로 방북(7.7~21)하였으며, 경향신문도 대북 문화정보화사업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승인(6.20)을 받아 한민족문화네트워크 구성협약차 방북(8.4~11)하였다. 중앙일보도 남북 언론 및 문화교류 협의차 방북(8.22~29)하였으며, 동아일보의 언론교류 및 문화유적답사 협의를 위한 방북(10.20~27)도 성사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임업연구원의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한 남북한 공동방제 제의('98.8), 민간단체의 공동조림협력 제의 등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제2차 TRADP 관련 환경워크샵(블라디보스톡, 9.3~4)을 통한 다자적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첫 유람선이 출항(11.18)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관광의 성사는 일반주민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방북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

다. 이미 현대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평양에 실내체육관의 건설과 체육교류의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1999년에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추세는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을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커다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동요 및 체제위기 심화를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피하고 있으나, 실리추구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과 북한의 외화획득 기대가 맞물려 문화·언론·종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남북체육교류,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등과 관련하여 체육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4. 인도주의적 사안

가.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완성을 주창하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라는 집단을 앞세우는 1당 지배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또한 모든 권위의 근거가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유래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의 인권개념은 '계급성', '집단이익 우선', '권리보다는 의무 강조' 및 '지도자의 시혜(인덕정치 등)' 등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권은 제도적인 보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시혜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경제난·식량난의 심화로 인한 식량배급의 절대부족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마저 극도로 위협 받는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1994년 이후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의료실태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약품이 부족하여 병원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며, 주사기와 체온계 등 기본적인 진료기구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장마당에서 구해와야 한다. 전직 의사였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영아의 5세까지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뿐만 아니라 결핵감염률도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98년도 석영환 외 70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개별적 탈북 외에 가족탈북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1998년에도 가족탈북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재외탈북자들은 신분불안정으로 인해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최악의 인권상황 속에서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 통치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공개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서(’97.1.22) 및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98.8.19)에서 보듯이 북한내에서 불법처형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억류정치범이 북한당국의 심각한 학대에 따른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는 등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는 지난해에 이어 1998년에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8.19)하여 북한정부가 자국민에게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9.8)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 행위 처벌규정(구헌법 제86조)을 삭제하였다. 이는 식량난 악화로 인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현상을 반영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인권개선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999년 북한의 인권상황은 체제의 특성상 인권문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생존권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고 의료실태는 계속 악화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금년도 곡물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식량사정이 약간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영양실조와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개처형은 국제사회의 압력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이 사회통제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모방범죄의 증가, 처형자에 대한 동정심과 당국에 대한 반발심 유발 등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상 인권관련 조항의 개정을 근거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을 희석시키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배급체계와해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주의 헌법에 신설된 거주·여행의 자유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개인사업, 자영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재외탈북자의 신변보호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7억6,638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998년의 경우에도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2억1,810만 달러), 국제적십자연맹(1,148만 달러, '97.12~'98.11) 및 민간기구를 통한 지원(589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7,943만 달러) 등의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내민간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내지원액은 3억1,630만 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44%를 차지하였다(<표 4> 및 <표 5> 참조).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3년 반동안('95.6~'98.11.31)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2억 7,342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3,159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남북주민간 접촉증대 및 민간단체의 희망을 고려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3.18)를 발표하였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계기 마련을 위해 남북적십자간 지원구도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민간의 대북지원 참여(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대표 참여, 대북지원 협의 및 모니터

링 목적의 방북 허용) 및 모금활동의 규제완화(자선음악회 및 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언론사·개별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 기탁 허용,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를 허용한 것이다. 이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민간단체들의 경우 국제적십자연맹 및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하여 대북지원에 참여하였으나, 일부단체들은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직접 식량지원을 추진하였다. 1995년 9월 이래 3차에 걸쳐 추진된 국내 민간단체의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은 4,288만 달러(한화 4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개별단체의 직접지원보다는 대한적십자사가 지원절차(대북전통문 발송, 표기 부착 등)를 담당하고, 민간단체가 물품구매, 운송,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여 지정기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한민족복지재단, 한국이웃사랑회, JTS 등 국내 민간단체들은 협력사업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정부차원의 식량 및 농업구조 개선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을 통한 지원에도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단순자연재해의 결과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단순 긴급구호형 식량지원방식에서 보건·의료지원 및 농업구조개선과 같은 개발지원형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도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지원과 개별 협력사업방식에 의한 지원이 동시에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한국의 대북지원('95.6~'98.12.1)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지원액수	경유기구	지원내역
정부차원	1995	23,200		국내산 쌀 15만톤
	1996	200	WFP	혼합곡물
		100	UNICEF	분유
		5	WMO	기상자재
	1997	600	WFP	혼합곡물
		34	UNICEF	ORS 공장비용
		1,053	WFP	옥수수, 분유
		1,000	WFP 등	옥수수, 분유, 복구장비 등
		50	IFRC	모니터 비용
	1998	1,100	WFP	옥수수, 밀가루
소계	27,342			
민간차원	'95.9~'97.5 (19회)	496 (396,915만원)	국제적십자연맹	밀가루, 분유, 담요, 식용유, 라면, 양말, 감자, 옥수수, 봄무종자, 봄배추종자
	'97.6~7 (1차지원)	850 (757,100만원)	대한적십자사	옥수수, 밀가루, 라면, 비료
	'97.8~'98.3 (2차지원)	901 (834,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옥수수, 수수, 밀가루, 식용유, 분유, 어린이영양제(비타민)
	'98.4~11 (3차지원)	1,898 (2,609,024만원)	대한적십자사	옥수수, 밀가루, 식용유, 분유, 비료, 씨감자, 양말, 한우, 소금, 쌀, 비닐, 젓소, 사료, 의약품, 의류, 유리, 애플란스, 초콜렛, 설탕
	소계	4,288 (460억원)		
총액		31,630		

<표 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목표	실적	비고
유엔기구	1차 ('95.9~'96.6)	2,032	927	미국 222.5, 일본 50, EU 38 실적/목표: 46%
	2차 ('96.7~'97.3)	4,364	3,47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실적/목표: 80%
	3차 ('97.4~'97.12)	18,439	15,781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53, EU 2,752 실적/목표: 84%
	4차 ('98.1~'98.12)	41,565	21,810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실적/목표: 52%
	소계	66,400	41,988 (4,092 포함)	실적/목표: 63%
국제적십자사	1차 ('95.10~'96.6)	415	349	실적/목표: 84%
	2차 ('96.4~'96.10)	574	443	실적/목표: 77%
	3차 ('96.11~'97.6)	1,080	756	실적/목표: 70%
	4차 ('97.7~'97.11)	1,733	1,403	실적/목표: 81%
	5차 ('97.12~'98.11)	1,400	1,148	실적/목표: 82%
소계	5,212	4,099 (496 포함)	실적/목표: 80%	
개별국	'95.9~'97.12		17,273	일본('95년 쌀15만톤), 중국('96년 12만톤, '97년 옥수수 19.5만톤, 쌀 1.2만톤), 대만('97년 쌀 2천톤), 미국('97년 옥수수 5.5만톤), EU(쌀 7.1만톤, 옥수수 24만톤, 보건의료 776.8만 달러), 스위스('95년 쌀 8천톤 등 246만 달러, '96년 보건의료 28만 달러, '97년 쌀·옥수수 197만 달러), 이탈리아('97년 쌀 29만 달러), 베트남('95년 쌀 100톤, '97년 쌀 1만톤), 러시아('95년 쌀 20톤 등 13.6만 달러, '97년 쌀 29만 달러)
	'98.1~'98.11		7,943	중국(곡물 10만톤, 비료 2만톤, 원유 8만톤), EU(3,000만 ECU 상당 식량, 1,000만 ECU 상당 보건의료), 스위스(생동육 1천톤), 독일(보건의료 109만 달러), 노르웨이(보건의료 67만 달러), 스웨덴(보건의료 19만 달러), 덴마크(종자 및 영농지원 48만 달러), 호주(보건의료·식량 11만 달러), 러시아(곡물 33톤)
	소계		25,226	
비정부간기구	'95.9~'97.12		4,746	Americares, 유진벨, 카리타스, Mercy Corps Int., Interaction, 조총련 등
	'98.1~'98.11		589	ADRA, CARE, MSF, German Agro Action 등
	소계		5,335	
총액			76,638	

다. 이산가족문제

북한은 이산가족을 북한체제를 배반하여 월남한 자들의 잔류가족으로 인식하고 적대정책을 취해 왔으며, 또한 이산가족의 재회와 교류가 가져올 외부정보의 유입을 우려하여 이산가족문제를 기피하여 왔다.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명하였다.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생사확인을 위해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 어떤 방식의 협의도 받아들일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은 공식적으로 안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추진하여 생존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7.4)하였다.

북한이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매개로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송 일본인처 고국방문을 시행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일본인처 제1진 15명('97.11)에 이어 제2진 12명('98.1)의 방일을 허용한 바 있다.

이산가족문제와 대북 비료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년 9개월만에 베이징에서 재개된 남북차관급회담(4.11~4.17)은 상호입장차이로 인해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남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북측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최소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시기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측은 비료지원이 이루어진 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선(先)비료지원, 후(後)이산가족문제 논의를 주장하

였다. 남측이 이산가족문제가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데 비해 북측은 비료를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응하여 자신들은 이미 남측에 두가지 큰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남측이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회담에 응한 것 자체와 비료문제만 논의할 수 있는 회담임에도 비료문제 외의 상호관심사를 토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선물이라고 북측은 주장하였다.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제도적으로 보장·지원하고 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이산가족을 제3국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로서 생사확인 1,391건, 서신교환 4,516건, 제3국 상봉 263건이 성사되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생사확인과 제3국상봉이 많이 증가하였다(<표 6> 참조).

<표 6>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연도별 성사현황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41	377	1,391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644	469	4,516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55	108	263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1998.12.31)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의 재북가족 지원 및 재결합을 위해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서신교류, 면회소 운영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98.4.14). 실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남한거주 이산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이산가족 정책은 제3국에서의 개별적, 비공식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의 방북상봉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지원 아래 「남북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회」를 결성(5.28)하였고, 이북5도청도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9.25)하여 각각 민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8.18)하고 통일부 장관의 훈령인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한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 9월 1일부터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북한에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 주민이나,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통일부 장관에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자격요건의 핵심은 북한측으로부터 방북 중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서류를 받아야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첫 방북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평안남도 출신의 이모씨가 9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승인을 받고 평양을 방문해 실제로 북측 이산가족을 만나고 돌아옴으로써 북한당국의 사실상의 승인 아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된 것이다.

9월 1일부터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방북자는 과거처럼 북한방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고 승인유효기간 최장

1년 6개월까지 소지가 허용되며, 이에 따라 수시 방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령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의 방북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가족, 재북(在北)가족을 문상 또는 문병하고자 하는 자, 북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등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1인당 45만원 가량의 여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98년 추가경정예산심의서에서 당초 지원금 예산 4,500만원을 1억2,3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정부는 북한 사회안전부가 3월 1일 설치한 주소안내소에 우리측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및 주소안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99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정책에 힘입어 제3국 상봉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1998년 한건에 불과했던 방북상봉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적십자간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에 신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999년에도 북한의 내부상황과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는 북한의 기존 태도로 인해 당국간 제도화를 통한 대규모 상봉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 미송환 국군포로

한국동란 기간중 북한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국방부자료에 따르면 1만9,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은 그 동안 수차례 걸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 결과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탄광 등 열

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군 포로들의 상당수는 증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로 이미 사망하였으며, 현재 생존해 있더라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각종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1997년 12월 국군포로 출신인 양순용씨가 탈북·귀환한 데 이어 1998년에도 장무환씨(9.30), 김복기·박동일씨(12.14)가 중국을 경유하여 귀환하였다. 이들의 잇달은 생존 국군포로에 관한 증언과 양순용씨의 정부지원금 반납을 계기로 금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와 이들의 국내정착지원문제가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98.6.24) 등을 통해 북한 내에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98년에도 남북한간에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출소공산주의자들을 전쟁포로라고 강변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북한적십자사, “남조선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등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 등에 이들의 복송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국방부 차관은 11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136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이들의 송환대책을 4자 회담·적십자회담·경제협력 등과 연계하거나 미전향장기수와 교환하는 방식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칭 「국군포로의 대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1999년에도 북한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들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군포로 및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희석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 등 관련

국제기구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에 대한 국제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나 장성급대화, 4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군포로문제를 거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1998년에도 남북한은 각종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 표기문제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명칭문제’ 논의에서 주요의제가 되었다. 한국은 동 회의에서 ‘문제지역의 명칭에 관해 관계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 권고,’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기’를 포함하는 「의장토의요약」을 채택토록 하였다. 상기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북한은 지지발언을 하였다.

2월에는 동아시아 안보문제와 관련한 3개의 국제회의에 남북한 정부관리 및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였다. 영국 외무성 주관하에 동아시아 안보 학술회의가 스테이닝(2.16~20)에서 열렸으며, 유엔군축센터 주관하에 동남아 유엔군축회의와 제10차 아·태지역 평화군축회의가 각각 자카르타(2.16~18)와 카투만두(2.20~24)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들에서 북한측 대표들은 고려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이 동아시아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남북한 참여자들간의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을 비롯한 98개 회원국, 11개 옵서버국 및 한국, 일본 등 피초

청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 각료회의(5.18~20)에서는 남북한 대표단들이 참여국을 대상으로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 각축전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유엔개혁 등 범세계적 문제, 지역분쟁문제, 경제·사회문제 등 3개 분야 353개 조항을 담은 「조정위 각료회의 최종문서」에는 「7.4 남북공동성명」 3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지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이 한민족의 공동 번영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의 한반도조항이 포함되었다.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 3원칙의 구체적 명시 및 고려연방제를 포함하는 한반도조항 문안을 제안하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한국은 부탄,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 10여개 비동맹 우방국들의 지지를 받아 남북한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된 한반도조항이 채택되었다.

제53차 유엔총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한국은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의 총회연설(9.25)을 통하여 남북한간 신뢰 회복 및 구축을 위해 대북정책 3원칙을 기조로 한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동해안 잠수정 침투, 로켓 발사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한반도 안보 위협행위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의 결실을 맺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북한간 통일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세우고,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총회연설(9.28)에서 “한반도와 인근지역에서 전개되는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결과로 20세기가 끝나거나 21세기가 개막될 시점에 또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더 임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전쟁 발발 위험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이

통일의 최대장애라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조성 책임이 전적으로 한·미측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입장 대립은 11월 9일에서 1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CSCAP)의 북태평양 실무회의 제4차회의에서도 나타났다. 동 회의에서는 동북아안보협력 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양자관계 발전, 한반도 정세, 핵비확산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되었는데, 북한은 지하핵시설 의혹이 허구이며 4차회담에서는 북·미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월 20일~22일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제5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도 남북한이 조우할 수 있었으나 북한이 불참석을 통보(5.2)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ARF 가입문제와 관련, 북한이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7월 27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ARF 제5차 외무장관회의 종료후 발표된 의장성명에는 베이징 남북회담 재개와 4차회담 출범의 환영,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 정전협정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련 국제기구 회의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제54차 총회(4.16~22)에 참가하여 이삼로 주태국 대사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들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악용,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김정일이 인간을 중시하는 주체

사상을 완성하였다고 선전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의 한계를 보였다. 남북한 대표단간의 조우는 북한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갈등 또는 협력관계가 노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ESCAP 최종보고서에 역내 국가간의 경제사회협력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과 함께 아시아 육상교통 인프라개발사업(Asia L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사업추진시 남북한을 포함, 미연결구간의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아태지역 경제사회개발사업에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나마 열렸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토의(6.11), 북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핵 정보보존을 위해 IAEA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요지의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이행조치를 촉구하면서 동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무총장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EU 및 9개 중동구국가 대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 조속한 이행조치 촉구, 정보보전 등 IAEA와의 협력 요청과 동 진전사항을 IAEA 이사회에 계속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8월 1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유엔인권소위(8.3~28) 의제 6항(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토의에서 한국, 일본등 4개국 정부대표, 박쌍용 위원등 5명의 소위위원 및 정대협등 6개 NGO가 군대위안부 문제, 특히 맥두걸(Gay McDougall)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이에 앞서 5월 26일 스위스에서 열린 「현대적 형태의 노예에 관한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죄와 국가적 배상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1998년 한 해동안 북한은 유엔 및 비동맹 관련 회의와 비정부차원의 안보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여타 정부간 차원의 정치·안보관련 국제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접촉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하게 남북한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1999년도에도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북한 금창리 지역의 대규모 지하시설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량살상무기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9년도에도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 확보에 노력할 것이나, 국제사회에서의 호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내년에도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과의 논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관련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는 제한적인 협력의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부록> 1998년도 주요 사건일지

1. 1 북한, 당보·군보 공동사설을 통해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특히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녹색혁명 주창
1. 6 세계식량계획, 65만톤 규모의 98년도 대북식량지원계획 발표
1. 10 북한 적십자사 대변인, 1차 일본인 처 고향방문시 일본 우익단체들의 소란과 보수언론의 비난에 대해 비난 성명 발표
1. 13~23 제7차 지명표준화회의시 “동해” 표기문제와 관련, 남북한의 공동된 의견 표명
1. 23~25 「청년동맹」 제8기 14차 전원회의 개최
1. 27~2. 2 일본인 처 고향방문단 제2진 12명 일본 방문
1. 30 미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2. 6 남북한과 미·중, 4자회담 실무회담 개최(뉴욕)
일본 오부치 외상, 북일수교 재개는 납치의혹 해결에 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경입장 발표
2. 6~7 북한, 1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청년 사회주의 총진군대회」 개최
2. 11 북한, 북일수교와 관련된 일본의 강경태도를 규탄
북한, 교수, 교원 등 지식인들에게 박사, 교수 및 학사 학위를 수여
2. 17~18 리평(李鵬) 중국총리 방러
- 중·러, 이라크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
2. 25 「국민의 정부」 출범 · 대북정책 3대원칙 천명
귀순자 강철환, 이순옥씨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에서 북한인권 실상 증언

- 3. 1 북한, 사회안전부에 「이산가족을 위한 주소안내소」 설치
- 3. 3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3. 8 북한, 「농근맹」 제7기 32차 전원회의 개최
- 3. 9 세계식량계획의 4차 대북식량지원 요청에 따라 5만톤 규모의 식량지원키로 결정
- 3. 13 북·미 양국, 4자회담 2차 본회담에 앞서 고위급회담 개최(베를린)
- 3. 16~21 4자회담 2차 본회담 개최
- 3. 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발표
- 3. 27 남북 학자들, '유네스코 동북아 5개국 국내위원회 회의 참가 및 협력사업' 위한 접촉(베이징)
- 3. 28 북한,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한국 새정부 출범 한달 평가에서 '실망'을 표명하면서도 관망적 태도를 유지
- 4. 11~18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비료지원 및 이산가족문제 협의
- 4. 11~17 남북한차관급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4. 14 북한, 「태양절 중앙보고대회」를 통해 '태양국'이라는 새로운 어휘 도입
- 4. 20 일·러 정상회담 개최
- 하시모토 총리,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국경선 획정 제안
- 4. 22 북한, 「직맹」 제7기 36차 전원회의 개최
- 북한, 「농근맹」 제7기 33차 전원회의 개최
- 4. 25 북한, 「여맹」 제5기 28차 전원회의 개최
- 4. 28 북한, 평양방송을 통한 김대중 정부 출범 두달 평가에서 원색적 비난 시작
- 4. 28~5. 5 성균관대 총장 방북 및 북한 고려성균관과 자매결연

4. 30 「남북경협활성화조치」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지정
기탁 형식으로 북한에 소 1,000마리와 옥수수 5만톤
을 북한측에 지원하기로 약정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방북 공연
5. 5 중·러, 최고 지도자간 전화회담 개통
5. 5~9 KEDO-북한간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고위급 실무협의
개최(북한, 묘향산 향산호텔)
5. 8 북·러, 제2차 과학기술협의회 회의 의정서 조인(평양)
5. 15~22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일행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
5. 16 국제옥수수재단 북한의 농업과학연구원과 「농업기술협
력계약서」 체결
5. 18 북한,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대
해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을 표명
5. 18~20 비동맹 조정위 각료회의 개최(콜럼비아, 카르타헤나).
남북한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된 한반도조항 채택
5. 18~29 러시아 해병 1개소대, NATO의 '세계평화를 위한 동반
자'계획에 따라 NATO와의 군사훈련에 최초로 참여
5. 20~22 한국, ARF 제5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북한이 동회의 가
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 표명
5. 25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회담 개최
5. 26 두레마을, 북한의 라선경제협조회사와 「라선두레농업회
사」 설립 계약서 체결
5. 26~6.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한 조선기독교도연맹 초청으
로 방북

- 5. 28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회」
결성
- 5. 28~6. 3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한
- 5. 29~6. 11 한국사진학회와 북한 조선사진작가동맹의 공동 사진전
시(서울)
- 6. 5 KEDO 집행이사국,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
안」 채택
북한적십자회, “북한내 일본인 행불자 부재”라는 조사
결과 공식 발표
- 6. 5 일본 총리, 북한적십자회의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
- 6. 8 북한, 민간부문 접촉·대화추진 목적으로 「민족화해협
회」 결성
- 6. 9 한·미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 「한·미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
 -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체결제8차 한·러 외무부 지역국장협의회 개최(모스크바)
 -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추진, 양국 고위인사
상호방문 문제, 엘친 대통령 특사 방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6. 11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과거 핵 정보보존을 위
해 IAEA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요지
의 「의장요약문」 채택
- 6. 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판문점을 경유 북한 방문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소 50마리 및 소 운반트럭
50대와 함께 판문점을 경유 북한 방문
- 6. 17 국제사면위원회, 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98년 연
례보고서 발표

6. 22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발생
 북한, 한국정부의 「통일대축전」 수용의사를 거부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서 체결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서 체결
 북한, 김정일 자강도 희천시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꺾기 모임」 개최
6. 23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 접촉 7년만에 재개
6. 24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
6. 25~7. 3 클린턴 미대통령 방중
 -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확인
6. 26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50마리 소떼를 싣고 판문점
 통해 1차 방북
7. 3 「북한 옥수수 심기 범국민운동」 비료 1천톤 북송
 러시아, 조성우 주러 참사관 추방
7. 4 김대중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
7. 6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한반도 평
 화회담 특사로 지명됨
7. 7~21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일행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7. 8 한국정부, 아브람킨 주한 러시아 참사관 맞추방
7. 10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한국산 무기부품 미군납품, 미국기술 지원받은 한
 국산 무기 제3국가 수출확대, 주한미군 장비 한국
 간 구매 등 합의
7. 12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 발생
7. 14~15 키리엔코 러시아 총리 방중

- 7. 24~25 엘 고어 미부통령 방러, 키리엔코 러시아 총리와 회담
- 7. 26 북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687명 대의원중 443명 교체
- 7. 28 미국, 대이란 미사일 기술 수출 혐의로 7개의 러시아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
- 7. 29 일본 자위함 3척, 항공기 5대와 러 전함 2척 및 항공기 2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군·공군합동 기동훈련을 전후 최초로 실시
- 7. 30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 취임
- 8. 1~2 북한, 청소년·학생들의 사상교육 배가를 위한 「영웅을 키워낸 학교 교장·담임교원 회의」 개최
- 8. 6~7 미 제7함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러시아 연해주 하싼 지역에서 재난지역에서의 구조활동 훈련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 8. 10~27 대북경수로서업 관련, 「품질보증」의정서 제3차 협상 개최(미국, 뉴욕)
- 8. 14~15 고무라(高村) 일본외상 방미,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및 코언 국방장관과 안보·경제 현안 및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협의
- 8. 15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대해 남북현안 논의를 위한 특사교환 및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는 남북상설대화기구 의 구성 제안
- 8. 17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 8. 19 유엔인권소위, 북한인권문제 관련 「대북인권개선결의안」 채택
- 8. 20 한국측 8.15제안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반대의사 표명

8. 21~9. 5 북·미 고위급 회담(뉴욕)
 - 4자회담 및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지하시설 건설 문제,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
8. 22 북한,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론 제시
8. 31 북한, 인공위성 시험발사
9. 1 통일부장관 훈령으로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한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을 신설,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일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 문제제기, 북일수교교섭 및 대북식량지원 유보, KEDO분담금 합의서 서명 보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검토 등을 결정
9. 1~2 마·러 정상회담(모스크바)
 - “21세기의 우호와 안보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9. 2 일본, 평양 왕래 직항 전세기 운항 중지
9. 3~4 제2차 TRADP 관련 환경워크숍 개최(블라디보스톡)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대회에서 개정된 헌법을 통해 국가주석제 폐지,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김정일을 실질적 최고직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9. 10 일본 도쿄에 탈북자 돕기 전문 민간단체 「북조선난민 구호기금」 출범
9. 15 장완니엔(張萬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회적으로 비난
9. 17 미하원, 클린턴 행정부가 요청한 3,500만달러 규모의 99회계년도 대북지원 예산 전액 삭감

9. 17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정보외교관 상호 추방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미 하원, 대북 중유공급 예산 3천5백만 달러 전액 삭감
결정
9. 20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개최(뉴욕)
- 미사일방어체계인 전역(戰域)미사일방위(TMD) 구
상을 위한 공동기술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
중국, 북·중간 변경무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약 30%
증가되었다고 보도
9. 22 미·일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
- 일본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 합의
9. 24 한·일 신어업협정 최종 조정안 타결
9. 25 이북5도위원회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한국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제53차 유엔 총회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3원칙을 기조로 한 북한 포용정책 추
진 설명 및 동해안 잠수정 침투, 로켓 추진체 발사실
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9. 28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 유엔 총회연설을 통해 한반도
의 긴장조성 책임이 전적으로 한·미측에 있음을 주장
9. 28~29 북한, 37년만에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를 많이 낳을 것을 강조
9. 30 국군포로 장무환 탈북 귀환

10. 1~2 북·미 미사일 회담 개최
10. 7 미 외교협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
10. 8 김대중 대통령 방일, 오부치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선언
10. 15 미 하원, 클린턴 행정부와 의 예산협상 타결 과정에서 대북 중유공급 예산 부활 결정
10. 20 한·미자동차협상 타결
10. 21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한·미·일·EU간 재정분담 서명 완료
10. 21~24 4자회담 3차 본회담 개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세르기에프 러 국방부장 방중
- 마일에 의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반대
- 무기 판매·기술이전 문제와 군간부 훈련문제 등을 중점 논의
10. 25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일본의 태도를 강력 비난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
10. 26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501마리 소떼를 싣고 판문점 통해 2차 방북
- 10.27~10.31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및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최종합의
10. 28 북한, 「민주조선」 보도를 통해 식량난이 북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선전
10. 29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김정일 면담
11. 3 북·러, 두만강 지역 「국경수역 분계선 확정 협정」 체결
11. 9 KEDO 집행이사국,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

- 11. 9 KEDO 집행이사국,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
- 11. 10 한·중 정상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12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선린우호' 협력관계인 현단계에서 '21세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
- 11. 11 한국정부,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 승인
- 11. 12 일·러 정상회담 개최
 - 21세기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한 「모스크바 선언」 발표
 - 양국이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일·러 합동위원회」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월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대북조정관에 임명
러시아, APEC에 정회원으로 처음 참가
- 11. 13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탈북자 정착초기 정부 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 11. 14 APEC 각료회의 개최
- 11. 16~18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간 회담(평양)
- 11. 18 현대금강호 첫 출항
- 11. 20 클린턴 대통령 방일, 오부치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해 공동대응 합의
 - 일본의 TMD 구상 참가 재확인
- 11. 21 한·미 정상회담 개최(서울)

11. 22 한·미 정상회담 개최(서울)
김정일, 신천 전쟁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미의식
과 계급의식 고양을 강조
11. 23 중·러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 ‘21세기에 즈음한 중·러관계’ 제하의 공동성명이
발표
한국 국방부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136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11. 26 일·중 정상회담 개최(일본, 동경)
-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관계 파트너쉽”이라는
공동선언 발표
11. 28 김종필 국무총리,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아시아통화기
금(AMF)’ 구성을 제안(일본, 가고시마)
11. 30 북한, 광명성1호 로켓발사에 참여한 과학기술자 160명
에게 국가표창과 학위직 수여
12. 1 북한, 제8기 15차 전원회의 개최
12. 2 미·중, 홍콩연안에서 사상 최초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12. 10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 기념총회 개최
12. 14 국회,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문」 북한에 전달
12. 16 국회 국방위원회, 「국군포로 대우 법률안」 의결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의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의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발간예정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의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